

# EU Brief

| EU 동향 |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본 EU의 외연 확대정책의 과제와 대응  
Expansion Policies of the EU in the Context of the Ukraine Crisis
- 과거와 달라진 유로화의 위상과 그 배경  
The Status of the Euro in the Past and at Present
-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정부의 출범과 정치경제 개혁  
Inauguration and Policy Direction of the Matteo Renzi Government
- EU의 메가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Progress in Mega FTA
-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경쟁력 제고 전략  
Competitiveness of European High-technology Industry and Strategies to Improve It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b>EU Focus</b>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본 EU의 외연 확대정책의 과제와 대응 ..... 002 Expansion Policies of the EU in the Context of the Ukraine Crisis
	<b>EU Economy</b> 과거와 달라진 유로화의 위상과 그 배경 ..... 004 The Status of the Euro in the Past and at Present
	<b>EU Politics</b>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정부의 출범과 정치경제 개혁 ..... 009 Inauguration and Policy Direction of the Matteo Renzi Government
	<b>Trade &amp; Investment</b> EU의 메가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 013 Progress in Mega FTA
	<b>Industry Trends</b>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경쟁력 제고 전략 ..... 018 Competitiveness of European High-technology Industry and Strategies to Improve It
	<b>EU Law</b> 분쟁광물 규제: 채찍보다 당근을 선택한 EU ..... 021 Regulation on Conflict Minerals: EU Puts a Carrot before a Stick
	<b>Social Issues</b> 유럽 창조산업의 떠오르는 핵 - 창조적 충돌(Creative Clash) ..... 027 'Creative Clash' in Europe
	<b>Report Review</b>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구제금융 탈출 ..... 032 PIIGS' Graduation from Financial Assistance
	<b>EU Centre News</b> 아시아 지역 대학원생 워크숍 ..... 034 Graduate School Students Workshop in Asian Region  제2차 한-EU 협력포럼 개최 ..... 034 The 2 <sup>nd</sup> Korea-EU Cooperation Forum  2014년 1학기 EU 아카데미 개강 ..... 035 The 5 <sup>th</sup> EU Academy in Spring Semester 2014  싱가포르 EU 공공외교 워크숍 ..... 035 Singapore EU Public Diplomacy Workshop  제1차 EU 현지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 036 The 1 <sup>st</sup> Ideas from the EU Seminar

#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본 EU의 외연 확대정책의 과제와 대응

## Expansion Policies of the EU in the Context of the Ukraine Crisis

For the last 10 years, the expansion of the EU towards central and eastern parts of Europe has been quite successful. Through the 5<sup>th</sup> expansion in 2004, 10 countries newly joined the EU including 8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Poland, the Czech Republic, Hungary, Slovakia, Slovenia, 3 Baltic nations of Lithuania, Latvia, and Estonia) and 2 countries in the Mediterranean region (Cyprus and Malta). In 2007, Romania and Bulgaria, and in 2013, Croatia also joined the EU as new members. Currently, the number of the EU member countries is 28. There are 18 Eurozone countries including Latvia which joined others in January 2014. 6 of them are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influence of EU is growing as it expands from the eastern part of Europe to the western border of Russia.

Such efforts for the expansion of the EU to the east, however, met a new phase following the crisis in Ukraine. The crisis originated from the suspension of the Association Agreement between Ukraine and the EU in November 2013; the former was deciding whether to join the partnership with the EU or the customs union with Eurasia. Thereafter, anti-government campaigns were launched, led by the western region where the pro-west Ukrainians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the population. The crisis was expected to end with the collapse of the pro-Russia regime at the end of February; but instead it began to exacerbate as Russia came to annex the Crimean Peninsula. What started as the regional conflict went beyond the national border and currently, there is 'a new cold war' between the West and Russia.

In response to such changes, the West including the U.S. and the EU, whilst denouncing Russia for the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carried on with

diplomatic negotiations, strengthened economic sanctions, and provided economic support for Ukraine, encouraging the establishment of pro-west government. In response, Russia, whilst continuing its diplomatic negotiations with the west, hit back with the warning of retaliatory actions to the economic sanctions and its army forces moved to consolidate its control over the Crimean Peninsula. Export restrictions will certainly cause substantial damage to Russia's economy; but Europe also stands to suffer, given its heavy reliance on Russian natural gas and oil. Because the impact of a full-blown economic war would be so catastrophic to both sides, the chances of an actual war are very low. Russia will likely engage in long-term diplomacy, with the stabilisation of the Crimean Peninsula in mind.

The EU has so far focused on economic cooperation in its relation with Russia via th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 To go beyond that requires efforts to strengthen cooperation in politics and diplomacy. In particular, a major issue is how the influence and identity that Russia desires to have in the EU-centric system will harmonise with the values shaped during the course of the EU integration.

Over the past century, Russia has had impact on the West via 3 major occasions: first, when Russia became a base for communism following the revolution in 1917; second, when Europe was divided into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 1945; and third, when the Soviet Union was demolished in 1989. In consideration of these events, forming a trustworthy relationship based on politics and diplomacy will make Russia not merely an eastern neighbour but a good companion of the EU. ★

Yongdae Shin, a Chair Professor at Kunkuk University

지난 10년간 유럽연합(EU)이 추진했던 중·동부 유럽으로의 외연 확대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제5차 확대를 통해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중·동부 유럽 8개국과 키프로스, 몰타 등 지중해 2개국을 포함한 10개국이 새로운 EU 회원국이 되었다. 2007년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 이어 2013년에는 크로아티아가 새로운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EU의 회원국은 모두 28개국이 되었다. 유로화를 도입한 국가도 2014년 1월 라트비아가 참여하면서 모두 18개 국가로 늘어났으며, 이 가운데 6개국이 중·동부 유럽의 국가들이다. 유럽의 동쪽에서 러시아의 서쪽 경계까지 EU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EU의 동쪽으로의 외연 확대 노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EU로의 접근과 러시아가 제안한 유라시아 관세동맹 참여 가운데 고민하던 우크라이나가 EU와 체결하기로 한 심층·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이 포함된 협력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2013년 11월 잠정 중단하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롯되었다. 이후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계 인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정부시위가 확산되었다. 지난 2월 하순 친러시아 정권의 붕괴로 사태 해결의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면서 위기가 확대되었다. 급기야 우크라이나 지역갈등을 넘어 유럽, 미국 등의 서방세계와 러시아 간의 이른바 '신냉전 체제'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EU와 미국 등 서방세계는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면서 외교협상의 지속, 경제제재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지원을 다각도로 추진하면서 친서방 정권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서방의 외교협상에 응하는 동시에 경제제재 및 군사훈련에 대한 보복행위 시사와 크림반도 합병 이후 러시아군 주둔 확대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경제제재의 핵심은 에너지인데, 러시아 입

장에서 천연가스와 석유는 생명선과 같아 수출이 제한되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러시아산 천연가스와 원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 또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전면적인 경제 전쟁으로 발전할 경우 심각한 악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 수출제한 가능성은 매우 낮다.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가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서방세계와 장기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피해를 줄이려 할 것이다.

그동안 EU는 러시아와 「동반자협력협정(Partnership and Cooperation Agreement)」을 통하여 에너지 분야 등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왔다. 앞으로 EU와 러시아가 경제 분야의 협력을 넘어 보다 대등한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러시아가 현 EU 중심의 유럽 체제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존재감과 정체성이 EU가 통합과정에서 이룩한 가치체제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관건이다. 러시아는 지난 세기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유럽의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왔다. 첫째는 1917년 혁명으로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거점으로 바뀐 때이며, 둘째는 1945년 2차 대전 종식 이후 동서 유럽이 분할된 시점, 셋째는 1989년 옛 소련연방이 붕괴된 때다. 이를 고려한다면 긴밀한 경제관계 이상으로 정치·외교적인 가치 측면에서의 신뢰관계 형성이 러시아가 단지 EU의 동쪽 이웃에서 좋은 친구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U 입장에서 유럽과 러시아의 발전적인 미래관계 설정을 위해서는 먼저, 유럽과 글로벌 사회에서 형성될 새로운 관계 속에서 러시아의 적합한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유럽이 러시아의 변화를 이끌어내기보다는 오히려 과거 러시아의 변화가 유럽 사회에 영향을 미쳤음을 감안해 사려 깊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U의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분야에서도 보다 조화롭고 통합된 형태로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

신용대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국제무역학과 석좌교수



# 과거와 달라진 유로화의 위상과 그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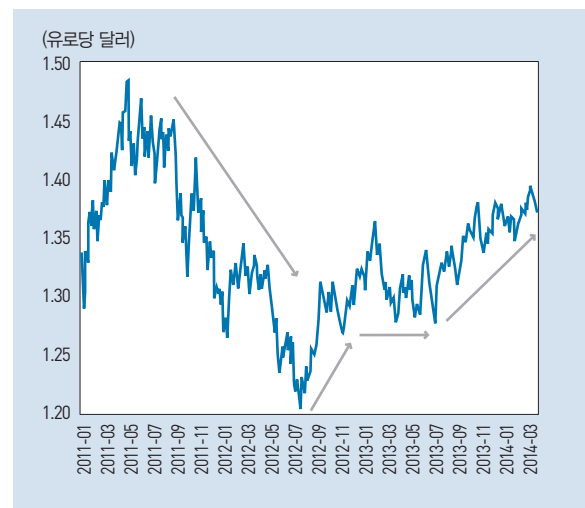
## The Status of the Euro in the Past and at Present

The value of euro has been rising for 8 months since July 2013. The euro appreciated 7.2% against the dollar during those 8 months, which is in contrast with the weak status of the euro from 2011 to late 2012. The other change worth noting about euro is that it is quite stable and the extent of appreciation is large in comparison to other major currencies. Among the 20 major currencies in the world, the appreciation rate of the euro is the fourth after the U.K. Pound, Korean Won, and Swiss Franc. The third change in the euro is that it continues to be stable despite the phasing out of the U.S. quantitative easing and the ensuing volatility in global financial market. The status of the euro is different from that in the past for four reasons: reduced likelihood of another eurozone fiscal crisis, increase in eurozone current account surplus, expansion of global portfolio investment into Europe, and reversal of differences in short-term euro-dollar interest rate.

### 과거와 달라진 유로화 모습

유로화는 2013년 7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약 8개월간 강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 7월 9일 유로당 1,278달러에서 2014년 3월 17일 1,392달러까지 올랐다가 4월 들어서는 1,37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절상률로 따지면 지난 8개월간(2013년 7월 9일~2014년 4월 4일)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7.2% 절상하였다. 이는 2011년 이후부터 2012년 하반기까지의 유로화 약세 기조와는 다른 모습이다. 2011년 5월 2일 유로당 1,483달러에서 2012년 7월 4일에는 1,206달러로 크게 하락하는 등 달러/유로 환율이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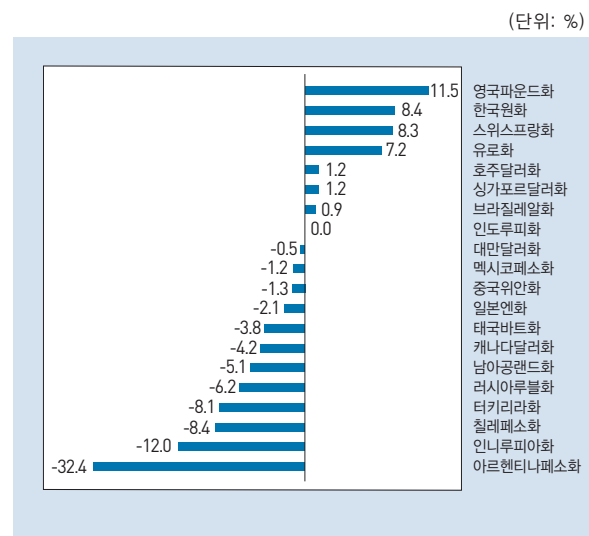
#### ★ 달러/유로 환율 추이



최근 유로화가 과거와 달라진 또 다른 모습은 주요 통화에 비해서도 크게 안정되어 있고, 강세 폭이 크다는 것이다. 세계 주요 통화와 비교해본 결과 2013년 7월 9일 대비 2014년 4월 4일 유로화는 20개 통화 중에서 영국 파운드화, 한국 원화, 스위스 프랑화 다음인 네 번째로 높은 절상률을 기록했다.

최근 유로화의 높은 절상률은 그리스 재정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한 2009년 말부터 2013년 6월까지의 유로화 움직임과는 크게 다른 모습이다. 2009년 12월 말 이후 유로화는 세계 주요 통화 중에서도 불안하고 약세인

#### ★ 세계 주요 20개 통화 절상률 비교(달러화 대비)



통화였다. 유로화는 세계 20개 통화 중에서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인도, 터키의 통화 다음으로 절하율(-10.7%)이 높았다.

유로화가 과거와 달라진 세 번째 모습은 2013년 7월 이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논란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크게 불안하거나 실제로 미국이 양적완화를 본격적으로 축소함에도 불구하고 유로화는 꾸준히 안정세를 보인 것이다. 국제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덩달아 약세를 보였던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이는 단적으로 달러/유로 환율과 VIX(Volatility Index)<sup>1</sup>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3년 7월 9일까지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06로 서로 상반된 움직임을 보였다. 즉, VIX 상승 시(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유로 환율은 하락(유로화 약세)하는 관계였다. 그러던 것이 2013년 7월 9일부터 2014년 4월 4일까지 두 변수 간의 상관계수는 +0.07로 이전과 달라졌다. VIX 상승 시(국제금융시장 불안) 달러/유로 환율은 상승(유로화 강세)하는 관계로 바뀌었다. 이를 두고 국제금융시장 일각에서는 유로화가 이제 위험통화가 아닌 달러화, 엔화와 마찬가지로 안전통화로 위상이 달라졌다고 주장<sup>2</sup>하기까지 한다.

### 유로화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4가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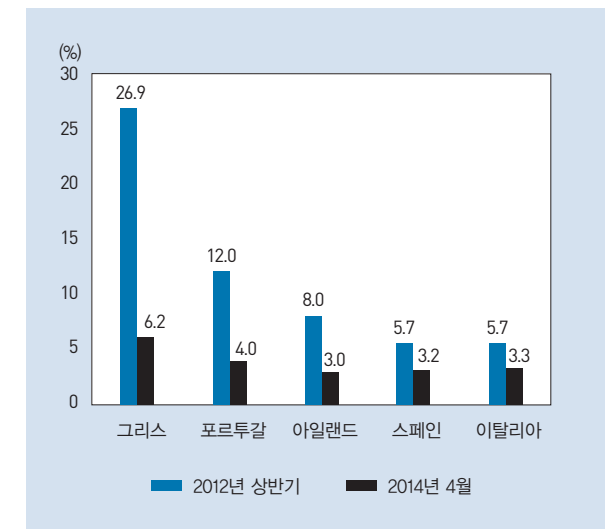
유로화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유로존 재정위기의 재발 위험성 약화,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의 유럽 유입 확대, 유로-달러 단기금리 격차의 역전 등 크게 4가지로 요약된다.

#### ① 유로존의 재정위기 재발 위험성 약화

유로존의 재정위기 재발 위험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재정취약국(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금리와

국가 CDS 프리미엄이 크게 하락했다는 점이다. 국채금리(10년물 기준)의 경우 유로존 위기가 고조되었던 2012년 상반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는 8%를 넘어섰고, 스페인, 이탈리아도 평균 6% 선에 육박하였으나 최근 들어 크게 낮아졌다. 특히, 가장 취약한 그리스의 경우에도 과거 26.9%에서 최근(2014년 4월 1~4일 평균)에는 6.2%로 약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 ★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국채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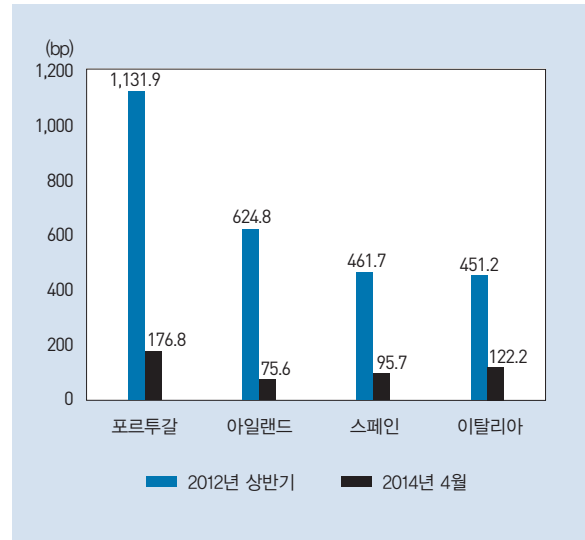


국가 부도위험을 보여주는 국가 CDS 프리미엄도 국채금리와 유사하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12년 상반기에는 재정취약국 모두 위험한 수준인 400bp를 상회하였던 것이 최근에는 100bp 전후로 크게 하락했다. 그만큼 국가부도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것이다.

유로존의 재정위기 재발 위험성 약화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재정취약국의 경상수지 개선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우려가 고조되었던 2010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재정취약국의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은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8.7%~△3.0%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최근(2013년 3분기 기준)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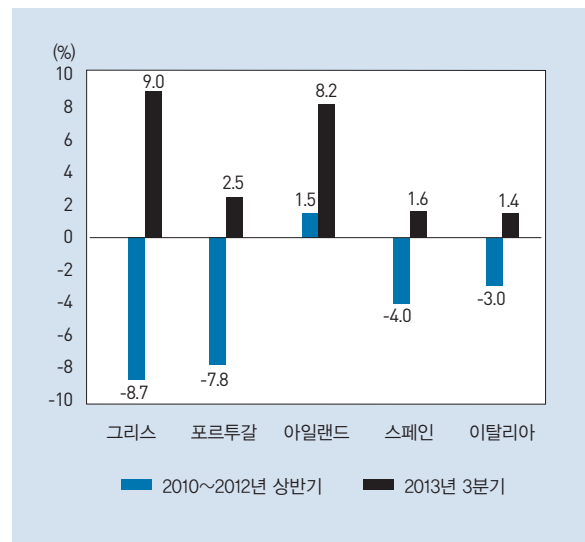
<sup>1</sup> VIX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정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시카고옵션거래소에 상장된 S&P500지수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sup>2</sup> Euro may be resurfacing as a safe haven. (2014. 2. 3.). Wall Street Journal.

★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국가 CDS 프리미엄



주: 기간 평균 기준, 2014년 4월은 1~4일 평균  
자료: Bloomberg

★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경상수지(GDP 대비) 변화



자료: Eurostat

재정취약국 모두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그만큼 이들 국가의 대외채무 상환능력이 개선되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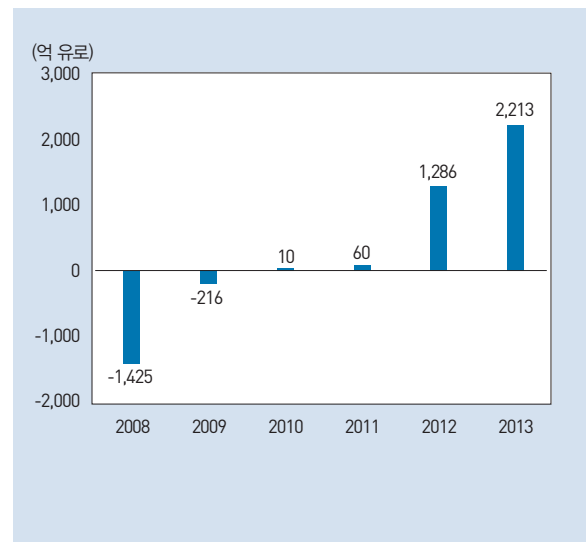
유로존 재정취약국의 국제금리, 국가 CDS 프리미엄이 크게 개선된 것은 ECB가 무제한 국제채매입 발표<sup>3</sup>등

적극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을 시행하였고, 재정취약국 국가도 재정건전화 노력을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유로존 경제의 성장세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재정취약국의 지표 개선에 일조하였다고 본다.

② 유로존의 경상수지 흑자 확대

유로화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재정취약국뿐만 아니라 유로존 전체의 경상수지가 크게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전체 경상수지는 2008년, 2009년 대규모 적자에서 2010년, 2011년에는 균형 수준으로, 2012년, 2013년에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경상수지 흑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경상수지 흑자액은 2013년 3/4분기 427억 유로에서 4/4분기에는 이보다 56.4% 늘어난 668억 유로를 기록하였다.

★ 유로존 경상수지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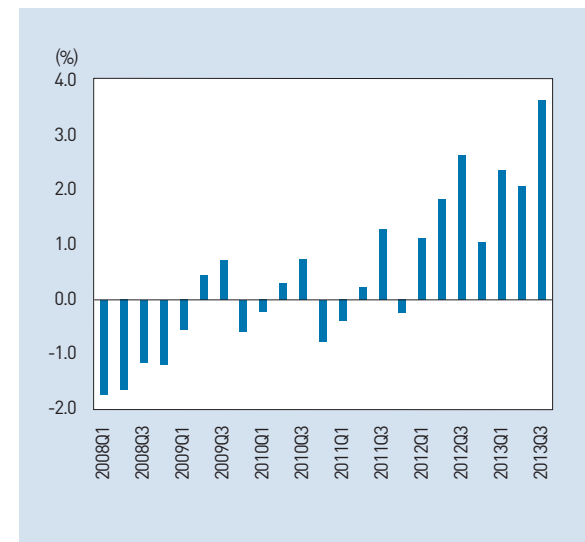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sup>3</sup> 2012년 9월 6일 ECB는 유로존 위기 대응을 위해 유통시장에서 무제한 국제채매입(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을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

이는 유로존 전체 경상수지를 경제규모(GDP)로 나눈 비율(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3%를 상회하고 있다. 그만큼 유로지역으로 달러화가 많이 유입되고 있어 달러화 약세, 유로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 유로존 경상수지 비율(GDP 대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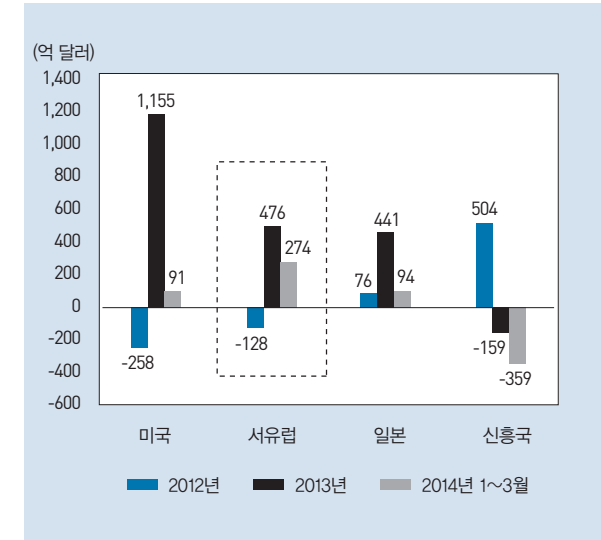


자료: Eurostat

③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의 유럽 유입 확대

유로화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의 유럽 유입 확대다.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은 2012년 서유럽에서 128억 달러가 순유출되었다가 2013년에는 서유럽으로 476억 달러 순유입되었고, 2014년에는 3개월 만에 2013년의 절반이 넘는 274억 달러가 순유입되었다. 다른 국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순유입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4년 1/4분기 선진국의 경우, 미국과 일본으로 순유입된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은 각각 91억 달러와 94억 달러로 서유럽(274억 달러)에

★ 지역별 주식투자 자금 흐름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신홍국의 경우 전체적으로 2014년 1/4분기에만 대규모 순유출(359억 달러)을 기록해 서유럽과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이 서유럽으로 대거 순유입된 것은 유로존의 재정위기 재발 위험성이 낮아진 데다 유로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유로존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신홍국의 위기 발생 우려가 확산되고, 중국 등 신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유럽으로 글로벌 주식투자 자금이 몰리게 한 요인으로 보인다.

④ 유로-달러 단기금리 격차의 역전

유로화가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지막 이유는 유로-달러 단기금리 격차의 역전이다. 3개월물 기준으로 유로리보와 달러리보의 격차는 2013년 1월 초에 -0.12%p로 유로금리가 달러금리보다 크게 낮았다. 그 이후 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다가 2013년 12월 6일에는 연중 처음으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즉, 유로금리가 달러금리보다 높아졌다. 그러던 것이 최근인

# 이탈리아 마테오 렌치 정부의 출범과 정치경제 개혁

## Inauguration and Policy Direction of the Matteo Renzi Government

After its inauguration in February, Matteo Renzi's government presented a reform programme to transform Italy through the first 100 days. This programme has been well-received by Italians since there is a general consensus that overcoming such a national challenge is the top priority at present. Neighbouring countries in Europe have voiced support for the reform. In the conference with Merkel, the German Prime Minister, and Hollande, the France President, the case of the Italian prime minister that both financial soundness and economic growth should be pursued at the same time was acknowledged. Although the EU leadership makes it clear that the Stability and Growth Pact and New Fiscal Compact can't be violated, they are content to monitor the progress of the reform for a while. The successful reform of Italy is essential for the recovery of Europe.

### 렌치 정부의 아심찬 출범

지난 2월 22일 출범한 이탈리아의 마테오 렌치 정부는 여러 측면에서 정치사적 의미를 갖는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정치인이 과도내각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를 구성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집권여당연합의 주요 일원인 민주당(PD) 지도부의 내부결정을 통해 엔리코 레타 정부가 실각하고 렌치가 바통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2013년 2월 총선 결과 민주당 연합은 하원에서 다수를 점한 반면, 상원에서는 의석수의 과반을 확보하지 못해 오랜 기간 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었다.<sup>1</sup> 진통 끝에 출범한 레타 정부는 개혁 작업을 진행하면서 중기적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으나 결국 단명했다. 그 이유는 개혁 프로그램의 가시적 효과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렌치는 당의 이러한 지지부진함을 비판하면서 자신이 단기간 내에 이탈리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집권에 성공하게 되었다.

전후 이탈리아는 정부의 평균수명이 11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 주된 요인이 단순

비례대표제로 대표되는 선거법에 있다고 보아, 1993년 다수대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그 이후 여야의 정권교체가 원활하여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이탈리아의 경제 성적표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저성장과 심지어 때로는 마이너스 성장에 시달렸으며, 국가부채는 GDP의 130%를 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하고 '유럽의 병자(sick man of Europe)'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다.

### 마테오 렌치 그는 누구인가

1975년생인 렌치는 39세로 이탈리아의 역대 최연소 총리이다. 이탈리아 중부 피렌체 출신으로 피렌체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였으며, 전후 장기 집권여당이었던 기민당(DC)의 후신인 이탈리아 국민당(PPi)에 1996년 가입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피렌체 현(Province) 선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여 2009년까지 지사직을 역임하였으며, 2009년 피렌체 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2012년 중도좌파 연합의 총리직을 희망하였으나 민주당의 예비선거에서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에게 패배하였고, 2013년 4월 베르사니가 사임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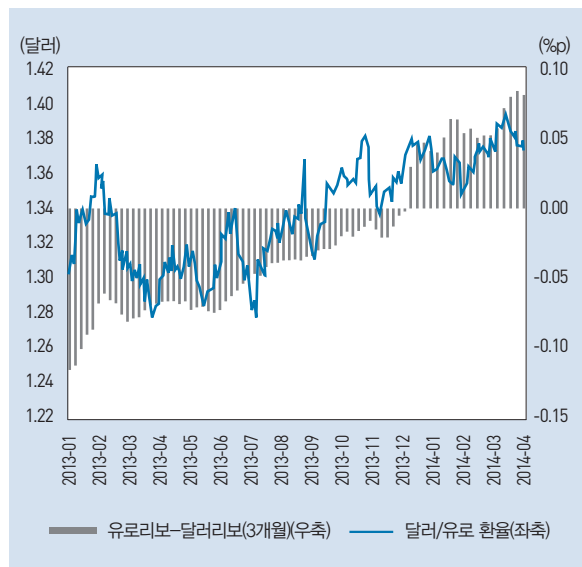
<sup>1</sup> 제1당의 의석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형의회(Hung Parliament).

이 2015년 중반 이후로 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sup>4</sup>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달라진 유로화의 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여기에 대해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유로화의 위상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2014년 3월 11일 이후 달러/유로 환율 전망치를 내놓은 42개 글로벌 투자은행의 종합적인 전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2014년 12월 말 달러/유로 환율 전망치는 평균 1.32달러로 최근 달러/유로 환율(1.37달러)보다 낮은 수준이다. 향후 유로화가 현재보다 다소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유로존 경제의 성장세 둔화 리스크와 디플레이션 우려로 ECB가 정책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등 이전보다 강한 통화완화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은행 구조조정 추진 과정에서 유로존 불안이 재발될 우려도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다 향후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중단한 이후 금융시장에서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도 중장기 유로화 약세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 유로존-미국 단기금리 격차 및 달러/유로 환율 추이



자료: 국제금융센터

유로-달러 단기금리 격차의 역전이 발생한 이유는 금리 흐름 측면에서 유로리보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달러리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 경제가 여전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단기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ECB가 2011~2012년에 걸쳐 저금리장기대출프로그램(LTRO)을 통해 공급했던 유동성(1조 유로 이상)을 최근 만기가 도래해 회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단기금리는 미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책금리 인상

<sup>4</sup> 2014년 3월 31일 엘런 미 연준 의장은 "미국경제는 물가안정과 완전고용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멀어 상당기간의 특별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발연해 금리인상 시기가 시장 예상보다 늦어질 것임을 시사.





재도전하여 당대표에 선임되었으며 차기 총리 후보로 물망에 오를 수 있었다.

렌치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며, 여름휴가 때마다 피정을 가는 충실한 가톨릭 신자로 유명하다. 가톨릭 국가라고는 하지만 일요일에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가하는 ‘실천 신자(practicing catholic)’가 소수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는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는 이남일녀를 두고 있으며, 그의 아내는 교직에 있다.

렌치는 그간 ‘싸움꾼(scrapper)’ 기질을 보여왔다. 2009년 피렌체 시장에 당선되자 시내 레오폴다역에서 군중 집회를 열었고, 이탈리아와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러한 낙네임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그의 투사적 이미지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청년 실업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만들었다. 그러나 2011년 집회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세대 정치인 모두가 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상당한 비판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젊어진 내각, 중도실용주의 정책

지난 2월 출범한 렌치 정부는 총리를 제외하고 16명의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역대 최소 장관수를 기록하였다. 절반이 여성이고 평균 연령은 47세로 이전 정부에 비해서 젊어진 내각을 구성하였다. 또한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에 여성을 기용함으로써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절반인 8명이 민주당 출신이고 신중도우파(NCD)가 3명, 중도연합당(UdC)과 시민의 선택(SC)이 각 1명, 그리고 무당파가 3명이 포진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새로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경험이 일천한 인사들도 다수 참여하여 불안정한 모습을 노정할 수 있다.

지역으로 보면 중부가 11명, 북부 3명 그리고 남부 출신이 2명에 불과해 과거에 비해 중부지역이 강하게 현시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볼로냐를 주도로 하는 에밀리아 로마냐 주가 가장 많은 장관을 배출하였다. 가족 중심의 중소기업으로 대표되며 ‘제3의 이탈리아(The third Italy)’로

불리는 이들 지역이 주도적 그룹을 차지하고 있어 향후 정책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학력은 절대 다수가 대학졸업자이고 법학과 정치학 전공이 지배적이다. 주요 경력으로는 국회의원이 가장 많으나 당료와 자치단체장 출신도 여러 명 등용되었다. OECD 사무부총장을 역임한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을 경제부 장관에 등용했는데, 이는 이탈리아의 경쟁력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외교정책의 기초는 친유럽적 정책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친미국적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우파 정권이 친미를 표방한 반면 유럽통합에 소극적이었던 점과 대조적이다. 실제로 렌치 총리는 여러 차례의 연설에서 유럽통합의 사상적 지주의 하나였던 알티에로 스피넬리가 주장한 유럽합중국(United States of Europe)을 지향하며 유럽의회의 권한 강화, 공동의 EU 예산 도입 및 유럽이사회 의장의 직선제를 지지해왔다.

지역적으로는 지중해 정책에 관심을 두며 북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정부재정을 건전화해야 하지만 성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재정적자 감축을 이유로 대학과 연구기술 분야에 투자가 미진하였으나 렌치 정부는 과감한 재정투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문제에서는 덴마크식의 유연안전(flexicurity) 모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정책조합을 전체적으로 볼 때 렌치의 정치적 성향은 실용적 중도(pragmatic centrist)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100일간의 개혁 프로그램

그렇다면 집권 이후 100일간의 개혁을 통해 이탈리아를 탈바꿈시키겠다는 마테오 렌치 총리의 개혁 프로그램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렌치 총리는 3월 12일 ‘긍정적 전환(La svolta buona)’이라는 문건을 통해 자신의 구상을 구체화하였다.

★ 마테오 렌치 내각

부처	이름	정당	나이 (성별)	출신	경력
총리	마테오 렌치 (Matteo Renzi)	PD	39(남)	피렌체	시장
외무	페데리카 모게리니 (Federica Mogherini)	PD	41(여)	로마	당료
내무	안젤리노 알파노 (Angelino Alfano)	NCD	44(남)	아그리젠토	국회의원
법무	안드레아 올란도 (Andrea Orlando)	PD	45(남)	라스페치아	국회의원
국방	로베르타 피노티 (Roberta Pinotti)	PD	53(여)	제노바	국회의원
경제	피에르 카를로 파도안 (Pier Carlo Padoan)	NI	64(남)	로마	OECD 사무부총장
경제 발전	페데리카 구이디 (Federica Guidi)	NI	45(여)	모데나	기업인
농림	마우리치오 마르티나 (Maurizio Martina)	PD	36(남)	베르가모	당료
환경	지안루카 갈레티 (Gianluca Galletti)	UdC	53(남)	볼로냐	국회의원
교통 인프라	마우리izio 루피 (Maurizio Lupi)	NCD	55(남)	밀라노	국회의원
노동 사회	지우리아노 폴레티 (Giuliano Poletti)	NI	63(남)	이몰라	당료
교육	스테파니아 지아니니 (Stefania Giannini)	SC	54(여)	루카	교수
문화 관광	다리오 프란체치니 (Dario Franceschini)	PD	56(남)	페라라	국회의원
보건	베아트리지체 로렌진 (Beatrice Lorenzin)	NCD	43(여)	로마	국회의원
정무	마리아 엘레나 보스키 (Maria Elena Boschi)	PD	33(여)	아레초	국회의원
행정 개혁	마리안나 마디아 (Marianna Madia)	PD	34(여)	로마	국회의원
지역	마리아 카르멜라 란체타 (Maria C. Lanzetta)	PD	59(여)	칼라브리아	당료

주: 민주당(PD), 신중도우파(NCD), 중도연합당(UdC), 시민의 선택(SC), 무소속(NI)

우선 국내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탈리아의 변화를 통해 유럽의 향배가 결정되리라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특히 2014년 하반기에 EU 의장국을 맡게 되는 이탈리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렌치 총리는 이탈리아의 고질병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지적하면서 100일간의 투쟁을 천명하였다. 즉, 4월에는 공공행정 분야의 개혁, 5월은 재정개혁, 그리고 6월에 사법 분야의 개혁을 통해 사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Index)를 2018년까지 50점 향상시켜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통해 7월 1일부터 이탈리아가 효율적으로 사회운용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혁 분야를 정치, 경제, 고용으로 대별했는데 정치 분야에서는 우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년간 안정적인 정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상하원 양원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 의회에서 상원을 폐지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을 지향하고 315명의 상원직을 폐지함으로써 재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이탈리아 공화국 헌법 제5장을 구성하는 지방자치에서 국가와 주(Region)간의 경쟁을 지양하고, 중간 행정계층인 현(Province)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경제노동위원회(CNEL)를 폐지하며 부패방지를 위한 의회기구를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

경제 분야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며 중소기업을 위한 신용제도를 강화하고 350억 유로를 투입하여 부실한 학교시설을 확충 보수하는 계획을 포함하였다. 주택정책을 개선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게 만들며, 주 차원에서 부과하는 법인세(IRAP)를 10% 감축하고, 5월 1일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조세는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할 것임을 밝혔다. 중소기업을 위한 신에너지 정책으로 10%의 비용 감축을 약속하였고, 월평균 1,500유로에 미달하는



# EU의 메가 FTA 추진 현황과 시사점

## Progress in Mega FTA

The trade policies of the EU have grown in direction of adapting to or taking the lead of changes in global commerce system. It focused on establishing the regional market as well as multilateralism till 2004; it embraced bilateralism from 2006 to 2011; and from 2012 onwards, pushed for the creation of 'mega FTAs.' With the new trade policy document released in November 2010, the EU has strengthened the existing FTA policies and presented specific directions such as abolition of non-tariff barriers to a third country, access to public procuremen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n active promotion of FTA policies on the part of EU results from the necessity to facilitate exports in order to overcome the stagnation of the EU economy in the aftermath of the financial crisis. As of the end of March 2014, EU is proceeding with FTA negotiations with 27 trading partners. Among them, the U.S. and Japan, the first and third largest economies in the world, are drawing the biggest attention. In the EU-China summit meeting held on March 31<sup>st</sup>, an agreement was made to promote mid/long-term FTA negotiation with China. The realisation of Mega FTAs will likely change the current order of world trade.

### EU는 메가 FTA 협상을 적극 추진

지금까지 EU의 통상정책은 글로벌 통상체제의 변화<sup>1</sup>에 순응 내지 주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EU의 통상정책이 2004년까지 역내시장 완성 및 다자주의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면, 2006~2011년의 기간은 양자주의 수용시기로 볼 수 있으며, 2012년부터는 거대블록화 시도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sup>2</sup>

EU는 2010년 11월에 발표된 新통상백서<sup>3</sup>를 통해 기존의 FTA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제3국의 비관세장벽 철폐, 정부조달시장 개방 및 지적재산권 준수 요구 강화 등 세부 사안들에 대해 구체화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EU의 新통상백서는 세계경제 침체를 초래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EU가 FTA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배경에는 재정위기로 인한 EU 경제의 침체와 위기극복을 위한 해외 수출 확대의 필요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sup>1</sup> 글로벌 통상체제의 중심축은 다자주의(GATT·WTO)와 양자주의(FTA)를 거쳐, 이제는 선진국 간의 FTA(EU-미국, EU-일본, EU-캐나다) 또는 거대 FTA(TPP, RCEP)와 같은 거대블록화로 변화.

<sup>2</sup> 강유덕 (2013).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EU 통상정책의 변화." 『EU 연구』, 34.

<sup>3</sup> European Commission (2011).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 Trade Policy as a Core Component of the EU's 2020 Strategy.

2014년 3월 말 현재 EU는 여러 무역상대국들과 FTA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2014년 3월 말 기준으로 총 27개국에 달한다. 이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끄는 협상국은 세계 1, 3위 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이다. 또한 지난 3월 31일에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현재 투자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중국과도 중장기적으로 FTA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로써 EU는 수년 내에 세계 1~3위 경제대국과 FTA를 체결하거나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EU를 포함한 경제대국들 간의 메가 FTA가 실현될 경우 세계경제는 GATT·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통상질서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현재 EU가 추진하고 있는 FTA 협상의 핵심인 미국, 일본, 중국과의 FTA 추진 현황과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 EU-미국 FTA(TTIP): 4차 협상 완료

EU와 미국은 2013년 2월 13일에 범대서양무역 투자파트너십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Agreement)의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이후 양측은 7월에 워싱턴에서 1차 협상을 가졌으며, 11월에는 브뤼셀에서 2차 협상을 개최했다.

관건은 역시 매우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성장과 고용률의 회복이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성장이 멈추었으나 EU 평균에는 못 미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탈리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 기반하고 있어 독일 수준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렌치 개혁도 탄력을 받기 어려울 것이다.

렌치 정부의 실험은 5월 22~25일에 치러질 유럽의회 선거를 통해 일차적으로 판가름날 것이다. 반유럽 정서로 무장한 극우세력의 지지율이 상승할 경우 유럽통합뿐 아니라 그의 개혁조치들도 추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반동을 위해 이탈리아의 개혁 성공은 필수다. 상대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유로권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회복은 EU 경제 전반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럽 위기극복의 마침표로서 이탈리아의 향배가 주목된다. ★

김시홍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소득생활자를 위해 연간 1,000유로의 세금을 5월 1일부터 감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노동정책에서는 18세에서 29세 사이의 학교 졸업자를 위해 4개월 내에 일자리를 찾아주거나 아니면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170억 유로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청년 연구자들에게 현행 6억 유로 수준의 지원금을 3년 안에 두 배로 늘린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6월 1일부로 사회적 기업을 위한 5억 유로의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예정이다. 신노동규약에서는 단기계약제를 단순화하고 용이하게 만들며, 6개월 내에 신노동법을 제정하고 실업자 보증을 개선하여 보편화할 것이고, 모성성에 기초한 여성노동정책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용이하게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 EU 경제 반동을 위해 렌치 개혁의 성공은 필수

이탈리아인들의 렌치 정부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어려운 국가의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럽 인근 국가들도 대체로 렌치 개혁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및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정건전화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시도해야 한다는 이탈리아 총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적도 있다. EU 지도부는 성장안정협약과 신재정협약의 내용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달고 있지만 큰 틀에서 그의 개혁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렌치 개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은 아직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거법 개정과 의회제도의 변화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100일의 시한을 정하고 시도되는 조치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할 경우 개혁이 좌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언론들도 렌치의 개혁안이 획기적이긴 하지만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 EU의 FTA 추진 현황

지역	협상대상국	진행 상황
북미	미국	4차 협상('14.3)
	캐나다	정치적 합의 도출
아시아	싱가포르	협상 종료
	말레이시아	쟁점분야 미타결
	베트남	7차 협상('14.3)
	태국	3차 협상('13.12)
	일본	5차 협상('14.3)
	인도	11차 협상
중남미	페루	임시협정 발효('13.3)
	콜롬비아	임시협정 발효('13.8)
	에콰도르	1차 협상('14.1)
	메리코수르	9차 협상('12.10)
중동·북아프리카(MENA)	모로코	2차 협상
	이집트	협상 착수('13.6)
	이스라엘	-
	요르단	3차 준비회의('13.11)
	레바논	미정
	알제리	미정
	팔레스타인	미정
	시리아	미정
	튀니지	미정
	리비아	미정
	걸프협력이사회(GCC)	지지부진
	우크라이나	협상 잠정 중단
동유럽	조지아	잠정 타결('13.11)
	아르메니아	7차 협상('13.7)
	몰도바	협상 타결('13.11)

주: 2014년 3월 31일 기준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4), Overview of FTA and other Trade Negotiations.

그리고 2013년 12월에 워싱턴에서 3차 협상이 열렸고, 지난 3월에는 브뤼셀에서 4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양측은 2014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TTIP 협상은 시장 접근, 규제이슈와 비관세장벽, 글로벌 통상규범 등 크게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다.<sup>4</sup>

첫 번째 분야인 시장 접근과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타결이 용이한 관세인하(상품교역) 외에도 농산물시장 개방, 서비스시장, 정부조달시장, 투자, 문화산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분야는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규제이슈와 비관세장벽이다. 안전, 위생, 기술표준, 환경기준과 관련된 무역기술장벽(TBT)과 관련되어 있다. 여기에는 식품 안전(유전자변형작물(GMO), 성장호르몬 쇠고기 등), 위생 및 검역(SPS), 환경규제(REACH, 항공기 탄소배출 규제 등), 금융규제, 표준 및 기술규정(자동차, 가전제품, 화학, 제약,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등), 정보보호(항공우주산업, 농업 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 번째 분야는 글로벌 통상규범으로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공동전략 수립(규제 수렴)이 목적이다. 여기에는 비경쟁 관행(국유기업(SOEs), 국산화 요건, 환율정책 등), 원자재 수출규제, 중소기업, 지적재산권(특히 보호, 저작권 보호), 지리적 표시(GIs), 개인정보 보호, 지속가능한 개발(노동 및 환경이슈), 에너지, 소비자보호, 세금 규제 등이 망라되어 있다.

현재 양측은 TTIP 협상을 통해 관세철폐(현재 4%대)보다 비관세장벽 제거와 규정 및 제도의 정합성 증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를 위해 EU와 미국은 표준 및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sup>4</sup> Member States endorse EU-US Trade and Investment Negotiations. (2013. 6. 14.),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즉, 기존의 표준 및 기술규정이 안전이나 환경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호 인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표준 및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 문제는 안전, 위생, 환경은 물론 소비자보호와도 연계되어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서 최종 타결까지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유럽과 미국의 소비자단체와 환경단체들은 TTIP 협상 시 규제이슈를 소비자보호 및 환경 문제와 연계해 신중히 접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이슈 해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및 환경 기준이 약화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EU와 미국은 기존의 소비자 및 환경 보호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규제이슈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TTIP의 소비자보호, 위생, 환경의 기본원칙은 가장 높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규제 수렴(regulatory convergence)'을 허용하되, EU와 미국이 더욱 강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수준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TTIP가 발효되더라도 미국과 EU, 그리고 EU 회원국들이 TTIP 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위생, 환경, 소비자보호 규정을 채택해 시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중국을 겨냥해 TTIP에 ISDS 조항 포함

그동안 TTIP 협상에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포함 여부가 주요 관심사 중 하나였다. ISDS 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투자를 유치한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 위반, 투자계약 등을 위배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투자유치국 정부를 상대로 국내법원 제소 또는 국제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전 세계 2,500여 개 투자협정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기업의 해외투자 보호를 위해서는 ISDS 제도가 필요하다. ISDS 제도를 통해 투자 대상국의 사법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er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 혹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등 제3의 재판부를 통해 공정한 판결이 가능하다.

EU 회원국들은 지금까지 1,400여 개의 양자 간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체결했는데, 모두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U는 EU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 시 분쟁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TTIP에 ISDS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해왔다. UNCTAD에 따르면, 2008~2012년에 제기된 총 214개의 ISDS 사례 중 113개(전체의 53%)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등 EU 기업이 제기한 것이다.<sup>5</sup>

EU와 미국의 경영자단체들<sup>6</sup>은 ISDS 조항이 TTIP 협정문에 포함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 ISDS 조항이 포함될 경우, EU 기업이나 미국기업은 모두 안전, 위생, 환경,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진출국이 기업활동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국 법원이 아닌 국제사법기구에 해당국 정부를 직접 제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자단체와 환경단체들은 ISDS 조항의 포함에 반대하고 있다. 반대 이유는 EU와 미국 모두 법률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굳이 ISDS 조항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ISDS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미국-호주 FTA를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결국 ISDS 조항은 TTIP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향후 예상되는 중국과의 투자 및 무역협정 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ISDS를 TTIP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EU의

<sup>5</sup> 최근 EU 기업들의 ISDS 이용 건수가 급증하는 추세. 2012년에 제기된 52건 중 60%가 EU 기업이 제기한 것이며, 미국기업은 단지 7.7%에 불과.

<sup>6</sup> Business Europe(유럽경영자연합회), 美상공회의소, 범대서양기업위원회(Transatlantic Business Council) 등.





정책입안자들은 현재 진행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나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TTIP를 글로벌 스탠더드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 EU-일본 FTA: 5차 협상 완료

2011년 5월에 개최된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양측 수뇌부들은 양자관계를 격상하기 위한 차원에서 정치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한 전략적동반자협상(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과 자유무역협정(FTA)<sup>7</sup>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sup>8</sup> 이후 FTA의 협상 범위와 수준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EU는 일본시장 접근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많은 비관세장벽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1년간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2012년 5월 EU 집행위원회는 일본과 '포괄적이고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18일 EU 집행위원회는 일본과의 FTA를 위한 협상권한을 위임해줄 것을 각료이사회에 요청하였으며,

2012년 11월 29일에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의 협상권한을 최종 승인하였다. 각료이사회는 EU 집행위원회에 협상권한을 부여하면서, 만약 일본이 비관세장벽 제거의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협상 1년 후 진행상황을 점검해 협상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유럽의 민감 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항을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1차 협상이 2013년 4월 15~19일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래, 2014년 3월 말까지 모두 다섯 차례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협상분야는 상품무역(시장접근, 일반원칙, 반덤핑·상계관계·세이프가드 등 무역구제제도), 기술장벽 및 비관세장벽, 원산지규정, 세관 및 무역촉진, 동식물 검역(SPS), 서비스무역,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분쟁해결, 기타 분야(규제이슈, 기업 지배구조 및 기업환경, 전자상거래, 동물복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 ★ EU-일본 FTA 추진 일정

구분	일시	장소
개시 선언	2013년 3월 25일	브뤼셀/도쿄
1차	4월 15~19일	브뤼셀
2차	6월 24일~7월 3일	도쿄
3차	10월 21~25일	브뤼셀
4차	2014년 1월 27~31일	브뤼셀
5차	3월 3일~4월 4일	도쿄

자료: European Commission, 일본 경제산업성

<sup>7</sup> EU-일본 FTA의 정확한 명칭은 「경제동반자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sup>8</sup> 일본정부가 EU와 FTA 협상에 나선 배경에는 일본기업들의 위기감이 크게 작용했는데, 일본기업들은 한국-EU FTA의 발효로 유럽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일본정부에 EU와의 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

#### ★ EU와 일본의 관심 분야

EU	일본
대일(對日) 수출품의 70%가 이미 무관세로 관세인하 여지는 별로 없음	공산품 관세 철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10%, TV 등 전자제품 14%)
자동차, 가공식품, 식품첨가제, 의약품 등의 비관세장벽 철폐	서비스무역
정부조달시장(철도장비 등)	투자(네거티브리스트 방식 채택)
서비스무역	-

양측은 무역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상품무역, 서비스, 투자의 점진적이고 상호주의적인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야심찬 협정을 원하고 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일본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일본의 비관세장벽 제거와 함께 철도 및 도시운송 분야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EU-중국 투자협정: 1차 협상 완료

EU는 2위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3월 22일~4월 1일)을 전후로 하여 지난 몇 개월 동안 양국 간의 통상 현안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지난 3월에는 EU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를 철회하는 대신, 중국은 유럽산 와인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양국은 경제규모를 감안했을 때 무역 및 투자 확대 여지가 많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EU로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 대한 수출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중국도 오는 2020년까지 EU와의 연간 교역규모를 1조 달러로 늘릴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는 2013년 교역규모(6,580억 달러)보다 52% 증가한 수치다.

지난 1월 21~23일에 EU와 중국은 투자 확대를 위해 베이징에서 투자협정(EU-China Investment Agreement)을 위한 1차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sup>9</sup> EU는 투자협정을 통해 중국의 투자환경이 개선되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경우 FTA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 개최된 EU-중국 정상회의에서 EU 수뇌부가 중국과의 FTA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발표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sup>9</sup> 2012년 2월 EU-중국 정상회담에서 투자협정을 위한 협상에 합의하였고, 2013년 10월 각료이사회가 EU 집행위원회에 협상권한을 위임한 이후 11월 21일에 열린 16차 EU-중국 정상회담에서 협상 개시가 공식 발표되었음.

### EU가 추진하는 메가 FTA로 인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비할 필요

현재 주요 경제대국들 간에 추진되고 있는 메가 FTA는 개별국가 간에 체결된 기존의 FTA와는 규모나 성격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EU와 미국의 TTIP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표준 및 기술규정은 물론 규제이슈와 글로벌 통상규범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메가 FTA는 GATT·WTO 체제로 대표되는 다자간 통상질서는 물론 기존의 FTA를 뺀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정부와 기업은 TTIP는 물론 EU가 일본, 중국과 진행하고 있는 FTA 및 투자협정 협상의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메가 FTA 발효로 인한 한국-EU FTA의 시장선점효과 상실 등 통상환경의 변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유럽 첨단산업의 경쟁력 현황과 경쟁력 제고 전략<sup>1</sup>

## Competitiveness of European High-technology Industry and Strategies to Improve It

In 2009, EU selected Key Enabling Technologies (KETs) in an effort to improve its competitiveness in high-technology industry. The KETs are sine qua non for achieving the vision of <Europe 2020 Strategy>, namely ‘Smart, 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The KETs include nano, micro·nano electronics, optics, and bio-technology, all of which help the transition to low-carbon, knowledge-based economy. The nub of the EU’s high-technology development strategy is to secure competitiveness through the innovative complex products. This entails developing products based on the integration of various KETs.

### 핵심기반기술(KETs) 육성 추진

2009년 EU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의 일환으로 유럽의 산업 및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기반기술(KETs: Key Enabling Technologies)을 선정했다. KETs로 선정된 기술은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의 비전인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 성장(smart, sustainable, inclusive growth)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산업·기술적 기반으로 필수불가결한 기술들이다.

유럽 2020 전략에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령화 등 사회적 대도전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ETs는 유럽 2020 전략의 산업적 측면 중 하나로 유럽의 산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지속가능성, 포용성을 갖는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KETs는 유럽의 기존 산업 부문을 강화하거나 부활시켜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기반기술로 신제품, 제조공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KETs의 목표는 유럽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 성장,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노령화와 같은 사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이나 솔루션 개발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KETs는 저탄소,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선도하는 기술로 나노, 마이크로·나노 일렉트로닉스(반도체 포함), 광학, 신소재, 바이오 및 전 분야에 적용되는 첨단 제조기술<sup>2</sup>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지식 및 자본집약적인 기술로, 빠르고 통합된 혁신 사이클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거액의 자본지출과 고도의 숙련자들을 필요로 한다. 한편, KETs의 영향력은 매우 광범위하게 미친다. 경제 전반의 제조공정, 제품, 서비스 혁신의 기반이 되며, 여러 과학 부문에 동시에 걸쳐 있다. 또한 기술통합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어 구조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KETs는 첨단 혁신제품에 탑재되어 있고, 유럽 가치사슬의 우위를 뒷받침하는 기술이다. KETs가 포함된 첨단제품이 많이 있는데 그중 전기차를 예로 들면, 전기차는 배터리용 첨단소재, 발전부문 전자부품, 에너지 절감형 광학기술, 저마찰 타이어용 산업 바이오 기술, 생산 과정의 첨단 제조시스템의 결합물이다. 따라서 이러한 첨단 혁신제품을 유럽 내에서 생산하고 이들 분야에서 유럽 산업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KETs의 발전이 필요조건이다. 첨단 혁신제품을 저렴한

<sup>1</sup> 본 원고는 <김계환 외 (2012). “국별 산업자원협력”, 세계경제의 구조변화와 산업자원협력 (연구보고서 3023-640(1)). 산업연구원.>의 내용을 수정 보완.

<sup>2</sup> 첨단제조시스템(AMS: Advanced Manufacturing Systems)은 생산시스템과 관련 서비스, 공정, 공장 및 설비를 포함.

가격에 공급할 수 있게 되면 수송시스템의 탈탄소화와 같은 사회적 대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KETs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있어 신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에너지(재생에너지, 바이오연료, 태양에너지 등), 운수(에너지 절감형 자동차 등), 제조공정(에너지 절감, 소재 절감 등), 화학(녹색 공정), 환경(환경모니터 센서 등), ICT(멀티미디어 컨버전스용 칩, 클라우드 컴퓨터), 의학(유전자 치료, 유전자 테스트 등), 소비재(핸드폰, 조명 등) 부문 등 매우 광범위한 산업에서 프론티어 기술의 발전에 필수요건이 되고 있다.

KETs 관련 제품의 시장잠재력을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EU의 보고서<sup>3</sup>에 따르면 2015년 1조 2,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용 바이오 기술 분야를 보면 2007년 동 기술에 의한 생산물은 480억 달러로 전체 화학제품 매출의 3.5%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그 규모가 3,40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학 기술 분야에서는 광학관련 부품 및 시스템 세계시장이 2015년 4,8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예로 첨단소재 부문에서 스마트 소재<sup>4</sup>의 시장잠재력이 2010년에는 약 196억 달러로 추정되지만 2016년에는 4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연평균 성장률이 낮게는 5%대에서 높게는 16%에 이르기까지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 ★ KETs 세계시장 규모 추정

구분	(단위: 십억 달러, %)		
	2008년 시장 규모	2015년 예상 시장 규모	성장률(CAGR)
나노기술	12	27	16
마이크로·나노전자	250	300	13
산업 바이오 기술	90	125	6
광학	230	480	8
첨단소재	100	150	6
첨단 제조 시스템	150	200	5
합계	832	1,282	-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1). High level expert group on key enabling technologies, final report.

<sup>3</sup> European Commission (2011). High level expert group on key enabling technologies, final report.

<sup>4</sup> 전기, 열, 화학, 기타 외부환경의 자극에 동태적으로 반응하는 소재군을 일컫음.

### KETs 관련 제품 생산과 무역에서 유럽의 위상

핵심기반기술의 가치사슬에서 유럽은 미국이나 아시아 경쟁국과 비교하여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EU 집행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생산 및 수출 제품의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기술 함량 지표와 유럽이 수출하는 제품의 경쟁 유형을 기준으로 유럽의 위상을 분석하고 있다.<sup>5</sup>

나노기술 관련 분야에서 유럽은 미국이나 아시아 경쟁지역에 비해 기술 함량이 낮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점점 더 함량이 떨어지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경쟁 유형을 보면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으나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마이크로·나노전자 분야에서는 기술 함량이 낮을 뿐 아니라 점점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강력한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우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 바이오 기술 관련 분야에서 유럽은 기술 함량이 높은 고품질 제품에 특화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까지 유럽의 입지는 더욱 강화되어 왔다. 가격경쟁에 노출되어 있으나 생산효율성 덕분에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광학 분야에서는 기술 함량이 높고 점점 높아지는 제품에 특화하고 있다. 단, 가격경쟁에 직면해 있으나 경쟁우위는 보이지 않는다. 광학분야의 세계시장은 가격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는 상황이어서 유럽은 광학분야의 첨단 제품을 특화하고 있다.

첨단소재 분야는 산업 바이오 기술 분야와 유사하게 기술 함량이 높은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함량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지만 유럽은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첨단 제조업은 유럽이 제품 생산과 무역에서 가장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야로, 수출제품의 기술 함량이 높고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수출이 품질경쟁 중심인 상황에서 유럽은 품질경쟁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 무역수지에서도 확실한 흑자를 보이고 있다.

<sup>5</sup> EU 집행위원회의 KETs Observatory <<https://webgate.ec.europa.eu/ketsobservatory/>>에서 전 세계 주요국의 핵심기반기술 경쟁력 상황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음.







### 유럽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유럽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은 보다 혁신적인 복합제품(complex products)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것은 여러 KETs 기술을 결합하는 통합기술에 기초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며, 경쟁 형태도 가격경쟁이 아니라 품질경쟁 중심으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 ★ KETs 관련 제품 생산과 무역에서 유럽의 위치

구분	수출품의 기술 함량	경쟁 유형	특허의 영향
나노기술	낮음, 감소	가격경쟁, 대부분 가격우위	낮음
마이크로·나노전자	낮음, 감소	가격경쟁, 가격우위 없음	높음
산업 바이오 기술	높음, 증가	대부분 가격경쟁, 가격우위	중간
광학	높음, 증가	가격경쟁, 가격우위 없음	낮음
첨단소재	높음, 증가	가격경쟁, 대부분 가격우위	낮음
첨단 제조 시스템	높음, 증가	대부분 품질경쟁, 품질우위	높음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3), European Competitiveness Report 2013: Towards knowledge driven re-industrialization.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EU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초기술 개발자와 부품 및 최종재 생산자 사이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KETs 기술 간의 상호작용과 융합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핵심기술 가치사슬의 모든 단계를 아우르는 클러스터를 발전시켜야 한다.

유럽의 첨단기술 및 산업 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유럽은 아이디어를 시장성 있는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 즉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이라 불리는 측면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의 KETs 육성전략도 이 ‘죽음의 계곡’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유럽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는 방식으로 통합 접근법(integrated strategy)을 모색하고 있다. 통합 접근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KETs는 성숙도에 따라 구분된다. KETs는 전통제품이나 신제품

모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첨단제품의 개발도 다양한 KETs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KETs에는 1950년대에 부상한 마이크로 전자에서부터 1980년대에 등장한 나노기술에 이르기까지 성숙도가 다른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성숙기에 있는 기술의 발전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최근 등장한 나노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KETs 분야 간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특히 혁신 제품은 하나의 KETs가 아니라 다수의 KETs를 동시에 체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유럽은 여섯 가지 KETs를 아우르는 통합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 접근법은 이미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 경쟁국에서 적극적으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 ‘죽음의 계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 잘 조율된 프로그램(coordinated programmes)을 도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혁신 사이클의 전 분야를 포괄한다. 기초 및 응용연구, 실증, 표준화 조치, 확산 및 시장접근성 개선을 동시에 포함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확산 정책은 기초과학에서 시제품 생산, 대규모 실증 및 공공조달에 이르는 기술개발의 모든 단계에 걸쳐 특화된 수단을 통해 지원받는다.<sup>6</sup>

### 유럽과 한국은 윈윈 관계를 모색할 필요

‘유럽병’이라는 개념이 시사하는 것처럼 유럽은 지식 생산에서는 뛰어나지만 지식의 상품화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기술연구, 제품개발 및 시연, 제조 및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는 혁신 사이클 단계 중 주로 뒷부분에 강점이 있다. 유럽과 한국은 서로가 필요로 하는 강점을 갖고 있는 셈이다. 첨단산업의 경쟁이 혁신 사이클 상의 여러 기업이 협력하는 네트워크 간 경쟁이라면 한국기업은 유럽 기업과의 공동 연구개발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새로운 시장 발굴과 개척에 공동으로 노력하는 역량 공유가 새로운 경쟁전략이 되어야 할 것이다. ★

김계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sup>6</sup> 미국 에너지성의 LED 고체조명(SSL: Solid State Lighting) 프로그램 사례: 기초 에너지 과학, 핵심 기술 연구, 제품 개발, 제조 연구, 개발 이니셔티브, 상업화 지원, SSL 파트너십, 표준화를 포함하는 포괄적 국가전략을 수립하여 시행.

# 분쟁광물 규제: 채찍보다 당근을 선택한 EU

## Regulation on Conflict Minerals: EU Puts a Carrot before a Sti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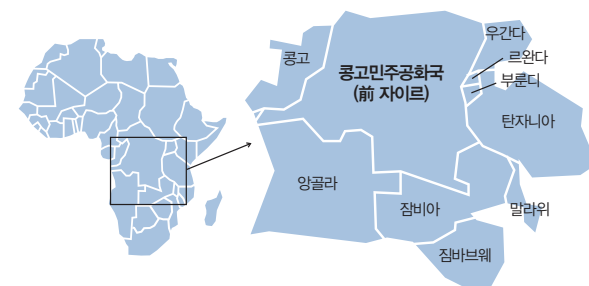
In 2014, the EU Commission proposed an initiative to better regulate mineral imports from conflict zones. The regulation targets tin, tantalum, tungsten - “Three Ts” - and gold; and the EU represents one of the largest markets for each of these sensitive minerals, importing 25% of global trade in the Three Ts, and 15% in gold. The proposed regulation is a voluntary self-certification scheme, requiring importing firms to exercise ‘due diligence’ by monitoring and conducting their purchases according to a series of steps set out by the OECD. It has only targeted a part of supply chain, a move designed to relieve any burden imposed on the downstream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espite the voluntary nature of this regulation, it seems unlikely that those firms not participating in the scheme would avoid the prospect of ‘naming and shaming.’ There is also a chance that mounting pressures from the European Parliament and NGOs would further strengthen the regulation.

### 분쟁이 끊이지 않는 콩고민주공화국

아프리카 중동부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콩고DR)은 외형적으로는 축복받은 땅처럼 보인다. 다이아몬드, 금, 구리, 코발트, 아연 등 가치가 높은 광물이 다량 매장되어 있고, 국가면적은 서유럽과 비슷하다. 하지만 지난 수백 년간 콩고DR은 축복받은 땅이라기보다는 저주받은 땅에 가까웠다. 20세기 초 자원 확보를 위해 벨기에 군대가 콩고DR로 대거 진출하며 국민 수백만 명이 노예로 희생을 당했다. 이어 1960년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부족 간 마찰, 공산주의자와 반공산주의자 간 마찰, 분리주의자와 통합주의자 간 마찰로 국정이 혼란스러웠다. 이 틈을 타 국방장관이었던 모부투가 쿠데타를 단행하였고, 1965년 대통령에 취임했다. 1971년 모부투 대통령은 국명을 자이르로 변경하였고, 이후 수십 년 동안 모부투의 독재가 지속되었다.

1990년대 중반 자이르에 저주가 찾아왔다. 저주는 인접국인 르완다에서 시작되었다. 1994년 자이르 동쪽에 위치한 르완다에서 강경 후투족이 투치족과 온건 후투족을 대량 살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962년 독립 이후 소수 엘리트 집단인 투치족과 다수 후투족은 르완다의 국가 통치권을 두고 분쟁을 벌여왔다. 1973년 쿠데타를 통해 후투족이 정권을 잡았고 이후 정부는 투치족을 억압하였는데, 1990년대 초 투치족 반정부세력이 조직화되면서 내전이 확산되었다. 1993년 유엔과 아프리카단결기구(OAU)의 중재로 내전 종식과 과도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었으나 1994년 후투족 출신의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강경 후투족의 대규모 학살이 시작되었다. 4월과 7월 사이 약 100일 동안 최대 100만 명이

### ★ 중동부 아프리카



무차별 학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에 1만 명씩 희생당한 셈이다. 1994년 말 현 대통령인 카가메가 이끄는 투치족 반정부군이 승리하며 내전은 막을 내렸다.

르완다 내전에서 패배한 후투족을 중심으로 약 200만 명의 난민이 인접국으로 이동했다. 자이르로는 약 150만 명의 난민이 유입되었는데, 이 중에는 전 르완다 정부의 수뇌부와 군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동부 자이르 지역을 기반으로 르완다 신정부에 대항하는 무장투쟁과 투치족 살인을 지속하였다. 당시 자이르 정부는 독재자 모부투 체제하에 부패가 만연한 상황이었고, 경제는 마비 상태여서 후투족과 투치족 간 마찰을 해결하는 것은 뒷전이였다. 오히려 정부는 1981년 투치족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였고 이후 투치족을 지속 억압했다. 이에 투치족 중심의 반정부 세력과 르완다 정부가 손을 잡고 1995년부터 모부투 정부를 전복시킬 계획을 추진했다. 르완다 정부가 우간다 정부, 부룬디 정부와 함께 자이르 반정부 세력의 핵심 인물인





카빌라를 지원하며 1996년 제1차 콩고전쟁이 시작되었다. 7개월도 안 되어 1997년에 카빌라 주도의 반정부 세력이 승리하였고, 카빌라는 대통령 취임 후 국명을 자이르에서 콩고DR으로 다시 바꿨다. 이 기간 동안 약 20만 명의 후투족 난민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빌라 대통령도 모부투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가통치보다는 개인의 부 증대와 자기 우상화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카빌라 대통령은 자신이 인접국의 꼭두각시라는 이미지를 희석하기 위해 우방국들의 군대를 콩고DR에서 내보내기 시작하였다. 1998년 르완다 정부는 후투족의 위협을 통제하고 지역평화를 달성하는 데 카빌라 대통령이 무기력하다고 판단하며 카빌라 대통령을 몰아내기로 결정했다. 르완다 정부가 콩고DR의 반정부 세력을 지원하면서 제2차 콩고전쟁이 시작되었다. 콩고DR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짐바브웨, 나미비아, 앙골라 등 인접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후투족 세력과 손을 잡기까지 하였다. 제2차 콩고전쟁은 다양한 부족은 물론 총 9개 아프리카 국가들이 직접 개입한 '아프리카의 제1차 세계대전'이었다. 2003년에 남아공의 중재로 관여국과 무장세력들이 평화협정에 합의하며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다. 하지만 마찰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8년 이후 10년간 콩고DR 내전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최대 550만 명이 사망했다는 분석이 있고, 2013년 하이델버그 연구소가 발표하는 <분쟁 바로미터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45건의 전쟁 및 준전쟁 가운데 5건이 콩고DR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sup>1</sup>

### 동아프리카 분쟁의 원인, 광물자원

동아프리카 분쟁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족 간 마찰과 주요국들의 안보 딜레마를 꼽을 수 있다.<sup>2</sup> 하지만 더욱 깊숙이 들여다보면 천연자원 확보를 둘러싼 마찰이 횡단적 이슈로 나타난다. 콩고DR의 동부 지역과 르완다 접경 지역에는 콜탄, 주석석, 철망간중석, 금 등

가치가 높은 원석이 대량 매장되어 있다.<sup>3</sup> 정부와 반정부 세력은 무기 확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광산 점유에 집중했다. 지금도 내전과 마찰이 대부분 주요 광산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 광물자원은 인접국들이 콩고DR 내전에 참여한 주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2001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내전 속에서 르완다, 부룬디, 우간다 군대가 불법적으로 콩고DR의 다이아몬드, 코발트, 콜탄, 금 등 광물자원을 자국 또는 국제시장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며 해당 정부를 규탄했다.<sup>4</sup> 그러면서 이 국가들이 반정부 세력을 앞세워 내전을 지속하고 땅따먹기를 하며 광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very lucrative business)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보여주는 근거로는 1997년과 2000년 사이 우간다와 르완다는 자국의 다이아몬드 채굴량보다 수출량이 더 많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5</sup> 제2차 콩고전쟁에서 콩고DR 정부를 지지한 국가들이 내전에 개입한 주요 이유로 정치 엘리트들이 콩고DR 내 확보하고 있는 광산개발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 ★ 2013년 콩고DR의 주요 자원 생산량 추정치

(단위: 톤, %)			
금속	콩고DR	전 세계	콩고DR 비중
탄탈륨	110	590	18.6
주석	4,000	230,000	1.7
텅스텐	—	71,000	0.5~1.0(추정)
금	—	2,770	2(추정)
코발트	57,000	120,000	47.5
구리('000)	900	17,900	5.0
산업용 다이아몬드(백만 캐럿)	17	80	21.3

자료: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Interior (2014), Mineral Commodity Summaries 2014.

<sup>3</sup> 이 원석에서 추출되는 탄탈륨(Tantalum), 주석(Tin), 텅스텐(Tungsten)과 금(Gold)을 3TG라고 부름.

<sup>4</sup>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2001. 5. 3.). Security Council condemns illegal exploitation of Democratic Republic of Congo's natural resources. (SC/7057). Press Release.

<sup>5</sup> Mullins, C. W. & Rothe, D. L. (2008). Gold, diamonds and blood: International state—corporate crime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ontemporary Justice Review*, 11(2), 81—99.

<sup>1</sup> Heidelberg Institute for International Conflict Research (2013). Conflict Barometer 2013.

<sup>2</sup> Williams, C. (2013). Explaining the Great War in Africa: How conflict in the Congo became a continent crisis. *Fletcher Forum of World Affairs*, 37(2).

더불어 거버넌스가 마비된 콩고DR의 광산에서는 강제 노동, 아동 노동, 열악한 노동 환경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벌어지는가 하면 무장단체들이 불법으로 채굴업체에 세금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평화정보서비스라는 기관이 콩고DR 동부에 위치한 약 800개의 광산을 조사한 결과, 2013년 기준 정부군 또는 무장단체가 불법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는 광산은 최소 410개에 달한다고 한다.<sup>6</sup>

광물을 사주는 곳이 없으면 무장단체들이 광산을 확보하기 위해 피를 흘릴 필요도 없다. 그럼 누가 콩고DR의 광물자원을 사는 것일까? 글로벌 대기업들이 대부분을 매입한다. 예컨대 콜탄에 포함되어 있는 탄탈륨은 휴대전화 및 기타 전자기기 생산에 들어가는 주요 광물로 2000년대에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다. 콜탄 광산을 둘러싼 전쟁이 확산되면서 제2차 콩고전쟁은 휴대폰 전쟁(mobile phone war)으로 불리기도 했다. 전자기기를 생산하는 대기업들이 콩고DR로부터 직접 수입을 하지 않더라도 공급사슬을 거쳐 생산 제품에 콩고DR의 광물자원이 포함될 수 있다.

### 국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

유엔 조사단은 콩고DR의 자원산업 상황에 대해 정리한 2002년 보고서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및 정정불안을 지원하는 활동이 밝혀져 당장 금융제재를 가해야 하는 기업 29개와 기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기업 85개를 명시했다.

#### ★ 주요 분쟁광물과 주요 산업

금속(원광)	수요 산업
탄탈륨(콜탄)	핸드폰, 전자 시스템,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공업장비, 항공기
주석(주석석)	납땜, 합금, 화학제품, 전기회로
텅스텐(철망간중석)	초경합금, 반도체, 핸드폰 진동 기능
금	보석

<sup>6</sup> International Peace Information Service (2013). Analysis of the interactive map of artisanal mining areas in Eastern DR Congo.

여기에는 아프리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 기업과 미국기업도 포함되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1976년에 제정된<sup>7</sup>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선언의 일부분으로 체약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의무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의 투명성, 굿 거버넌스, 인권보호 관련 권고사항 기준에 따라 기업들의 콩고DR 자원 사용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하지만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비윤리적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통제할 방법이 제한적이다. 비윤리 기업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방안이 가장 강도가 높은 대응책이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는 분쟁광물 문제와 직결된 내용도 한계가 있다. OECD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2011년 'OECD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의 책임 있는 광물자원 공급사슬을 위한 실사 가이드라인'(이후 'OECD 광물 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OECD 광물 실사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기업의 윤리적 활동을 광물산업에 특화한 것으로 광물 공급사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주요국들의 분쟁광물 규제 법안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다. 'OECD 광물 실사 지침'은 강력한 회사 관리 시스템 수립, 공급사슬 내 위험 평가 및 식별, 위험 식별 대응전략 이행 및 설계, 제련소 실사 실행에 대한 제3자 독립 감사, 공급사슬 실사 결과 연간 보고 등 5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OECD 광물 실사 지침'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sup>8</sup>

법적 구속력이 있는 분쟁광물 문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2010년 8월 제정한「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에 분쟁광물 규제(1502조)를 포함시켰다. 분쟁광물 규제안이 금융산업 개혁안에 포함된 이유는 특정 기업이 분쟁광물 및 인권침해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 이를 투자리스크로

<sup>7</sup> 1979년, 1982년, 1984년, 1991년, 2000년, 2011년에 개정. 2011년 개정안은 1. 개념과 원칙, 2. 일반정책, 3. 정보공개, 4. 인권, 5. 고용 및 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 뇌물 간청 및 강요, 8. 소비자 보호, 9. 과학기술, 10. 경쟁 정책, 11. 조세 등의 항목으로 구성.

<sup>8</sup> OECD (2011).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sup>9</sup> 2012년 8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1502조의 세부 시행령을 공포하였고, 2014년 5월 31일 분쟁광물 사용여부 보고의 제출 시한을 앞두고 있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기업들은 매년 분쟁광물 사용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상장폐지까지 가능하다. 이 법안은 분쟁광물을 콩고DR과 그 인접국에서 채굴되는 콜탄, 주석석, 금, 철망간중석과 이들의 파생 금속 그리고 미국 국방장관이 분쟁 지원자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광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는 거의 모든 제조업 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다운스트림 업체들은 소재 및 부품 협력사들과 업스트림의 채굴업자 실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증권거래소는 이 법안을 도입함으로 인해 기업에 30억~40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 발생하고, 이후 매년 2억~6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EU는 미국과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

2010년 유럽의회는 EU도 미국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의 1502조와 같은 분쟁광물 규제를 마련하여 법제화하자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EU 집행위원회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를 거쳐 2014년에 법안을 제안하였다.<sup>10</sup> EU는 전 세계 주석, 탄탈륨, 텅스텐 수입의 4분의 1, 금 수입의 7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EU 법안의 내용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U의 법안은 자기인증제도를 통한 선택적 규제다. EU는 대상 광물을 수입하는 EU 업체<sup>11</sup>들에게 선택적으로 OECD의 기준에 맞추어 광물 판매 및 매입에 대해 실사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사를 하기로 결정한 EU 수입업체는 회사 관리 시스템, 위험 평가 및 식별,

제3자 독립 감사, 실사 결과 공개 등 4개 주요 항목의 규정을 수행해야 한다. EU는 광물가치사슬에서 분쟁광물 문제를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상 기업을 수입업체로 국한했다. 의무적 규제보다 선택적 규제를 선택한 데에는 다운스트림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sup>12</sup> 글로벌 공급사슬을 통해 미국기업과 연관된 EU의 많은 광물 수입업체들과 사용업체들은 간접적으로 미국 법안의 영향을 받아 이미 실사를 추진하고 있다.<sup>13</sup> 또한 2010년 미국이 의무적 광물규제를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실사를 해야 하는 동아프리카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광물 공급사슬을 이동하면서 동아프리카의 광물산업이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지연 및 취소하면서 실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지역 마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적 규제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 ★ EU의 분쟁광물 규제에 따른 발생 비용

(단위: 유로)

구분	초기 비용	매년 발생 비용
현안	540만	110만
고강도 방안	84억	17억

주: 고강도 방안은 3TG 사용과 관련된 1,000개 EU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급사슬 실사를 의무화하는 시나리오  
자료: European Commission (2014),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Impact Assessment

EU는 수입업체들의 선택적 실사를 장려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대상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핸드폰, 컴퓨터, 프린터 등의 공공조달 시 실사를 시행한 수입업체의 자원을 사용한 기업들에 혜택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에는 실사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EU는 이 제도가 선택적이지만 매년 실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기업들이 실사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언론과 여론의 비난을 버티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up>12</sup> NGO들은 대기업의 압력으로 인해 EU가 선택적 제도를 선택했다고 비판.  
<sup>13</sup> EU 집행위원회는 분쟁광물 관련 실사를 시행해야 하는 6,000여 개 미국 상장기업의 글로벌 공급사슬에 약 15만~20만 개의 EU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

대상 광물은 OECD, 미국과 마찬가지로 콜탄, 주석석, 금, 철망간중석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미국과는 달리 대상 지역을 콩고DR과 주변국으로 국한하지 않고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으로 명시하고 있다. 분쟁지역 및 고위험지역은 무력분쟁 중이거나 분쟁 후 취약한 상황의 지역, 거버넌스가 약하거나 붕괴된 지역, 인권침해 등 국제법을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동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분쟁광물을 생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국가 안보 상황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정 국가를 대상 국가로 지목할 경우 낙인효과로 인해 非분쟁광물 산업 및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결정이었다.

#### EU의 느슨한 규제에 대한 비판이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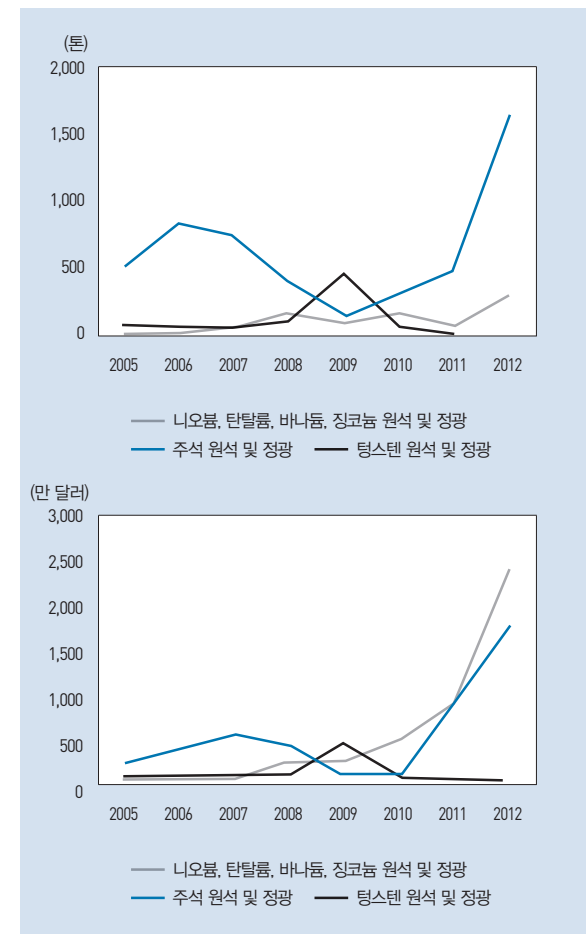
EU 집행위원회가 분쟁광물 수입에 대해 선택적인 규제를 제안한 이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분쟁광물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다운스트림의 업체들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비난의 중심에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미국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제안한 데에는 의무적 규제가 대상 광물을 생산하는 국가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하지만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이 동아프리카 광물산업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중장기적인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2011년 세계 2위 주석 생산업체이며 동부 콩고DR에서 생산되는 주석의 약 80%를 매입하던 말레이시아스멜 텅코퍼레이션(MSC)은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 도입을 앞두고 콩고DR에서 생산되는 주석 매입을 중단했다.<sup>14</sup> 그 결과 콩고DR의 주석 생산량이 2010년 6,700톤에서 2011년 2,900톤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콩고DR의 주석 생산량이 회복세를 보이며 2012년과 2013년(추정치)에 각각 4,000톤을 기록했다. 그리고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의 대상이 되는 광물 수출 규모와 금액이 2012년 콩고DR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sup>15</sup>

2010~2011년에 기업들이 숨고르기를 하며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대비를 한 후 콩고DR에서 다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1년 MSC는 국제주석연구소의 주석 공급사슬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채굴되는 주석에 채굴광산과 거래내역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꼬리표를 붙이고 이에 대해 제3자 독립감사를 시행하는 모니터링 체계로 현재 파일럿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MSC는 이니셔티브의 기준을 충족하는 광산에서 생산하는

#### ★ 콩고DR의 규제 대상 광물 수출 규모 및 금액



자료: International Trade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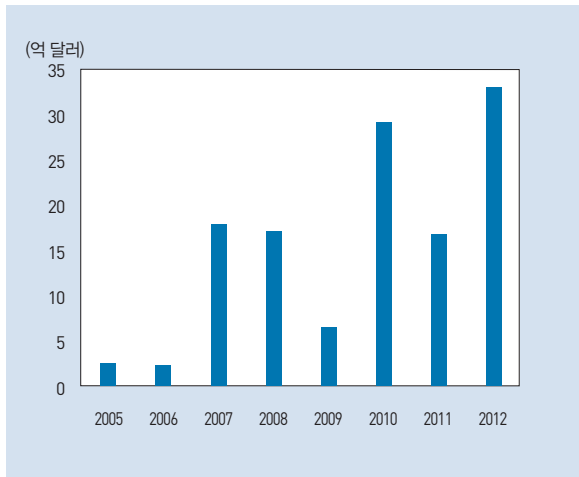
<sup>9</sup> Cook, N. (2012). Conflict minerals in Central Africa: U. S. and International Respons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up>10</sup> European Commission (2014).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setting up a Union system for supply chain due diligence self-certification of responsible importers of tin, tantalum and tungsten, their ores, and gold originating in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sup>11</sup> 대상 업체는 대상 광물 수입 전문업체 300여 개, 대상 광물을 직접 수입하는 제련소와 부품 제조업체 각각 20여 개와 100여 개 등 총 400개 이상.

<sup>14</sup> Seay, L. E. (2012). What's wrong with Dodd-Frank 1502? Conflict minerals, civilian livelihoods, and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western advocacy (Working Paper No. 284).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sup>15</sup> 2012년 콩고DR의 자원 수출이 대폭 감소하기는 했으나 이는 주요 광물 수출품목인 구리와 코발트 원석 및 정광의 수출 감소에 기인.





★ 콩고DR의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자료: UNCTAD

주석을 다시 매입하기 시작하였고, 2012년에는 MSC가 투자한 비시(Bisie) 프로젝트에서 채굴을 시작했다.<sup>16</sup> 콩고DR로 유입된 총 해외직접투자도 2011년에 축소되었다가 2012년에 회복하면서 2010년 수준을 상회했다.

2013년 9월 59개의 유럽 및 국제 NGO들은 인권 수호와 내전 종식을 위해 분쟁광물에 대한 의무적 규제 도입을 촉구하는 보고서를 EU 집행위원회에 공동 제출하였다.<sup>17</sup> EU 집행위원회의 규제 발표 마지막 순간까지 권위 있는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에게 분쟁광물에 대한 의무적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서면을 보냈다.<sup>18</sup>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에 실망한 NGO들은 “EU 회원국 정부는 이미 ‘OECD 광물 실사 지침’을 채택한 상황으로 EU의 선택적 규제는 쓸모가 없다.”, “미국이 올려놓은 국제기준을 EU가 끌어내리려고 한다. 규제완화 경쟁(race to the bottom)을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언급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다.<sup>19</sup> 더불어 선택적 규제가

기업에 결코 좋은 방안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기업들이 광물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발생하는 비용과 구축하지 않을 경우 기업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저울질하며 기업 전략에 혼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의무적 규제는 기업들이 실사 체계를 구축하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여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받는 것을 막는다는 주장이다.<sup>20</sup>

EU 집행위원회가 규제를 제안하기 전인 2014년 2월 유럽의회의 개발위원회는 <책임 있는 사업 활동을 통한 개발도상국의 발전 촉진>이라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제안서에서는 EU의 분쟁광물 관련 규제가 1) 의무적이어야 하며, 2) 공급사슬 모든 부문과 모든 천연자원에 적용되어야 하고, 3)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4) 미국 「도드 프랭크 금융규제 개혁법안」의 규제에 필적하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21</sup> 해당 제안서의 대표 발의자인 주디스 사르젠티니 의원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규제를 “예쁘게 포장된 텅 빈 상자”라고 비판했다.<sup>22</sup> 유럽의회의 법안 통과 목표시점인 2014년 9월을 앞두고 의회 의원들과 EU 집행위원회의 마찰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쟁광물 규제 강화에 대비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법안이 선택적이기는 하지만, 광물 공급사슬 실사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체들은 공개 망신 주기(Name and shame)의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유럽의회와 NGO의 압력으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실사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up>16</sup> Miners brace Congo's warlord history as demand for tin soars. (2014. 3. 25.). *Bloomberg*.  
<sup>17</sup> Joint CSO Coalition (2013). Breaking the links between natural resources and conflict: The case for EU regulation(A civil society position report). CIDSE.  
<sup>18</sup> Human Rights Watch (2014). Re: Mandatory reporting on conflict minerals.

<sup>19</sup> Global Witness (2014). Proposed EU law will not keep conflict resources out of Europe, campaigners warn.  
<sup>20</sup> Why Europe's 'opt in' rules on conflict minerals could fail to spark change. (2014. 3. 13.). *The Guardian*.  
<sup>21</sup> European Parliament-Committee on Development (2014). Report on Promoting development through responsible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the role of extractive industries in developing countries.  
<sup>22</sup> EU drafts conflict minerals law, with opt-in clause. (2014. 3. 4.). *EurActiv*.

# 유럽 창조산업의 떠오르는 핵 - 창조적 충돌(Creative Clash)

## ‘Creative Clash’ in Europe

As the EU economy was gradually recovering in late 2013, good news was delivered to cultural circles in Europe. On December 5, 2013, <Creative Europe 2014~2020>, a mid to long-term support plan for the culture industry was confirmed and announced. Despite the long-term economic stagnation, a total amount of 1,460 million euro, which is 9% more than the <Creative Europe 2007~2013>, has been appropriated with the high expectation from the EU concerning the role of culture industry. This support plan focuses on the economic impact of culture. As the integration of culture and economy became the most important issue in culture industry policies of EU, ‘Creative Clash,’ a non-profit organisation founded in 2009 with EU Culture Programme, is in spotlight again. ‘Creative Clash’ is a network of Artistic Intervention in Organisations in Europe to encourage mutu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through the creative meeting of art and business.

### EU의 문화 지원안 <창조적 유럽 2014~2020>

2013년 후반 EU 경제가 점차 회복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유럽 문화계에도 희소식이 전해졌다. 2013년 12월 5일 EU 문화산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인 <창조적 유럽(Creative Europe) 2014~2020>이 확정 발표된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1차 <창조적 유럽 2007~2013>보다 9% 증액된 14억 6,000만 유로가 지원되어 문화산업의 역할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높은 기대를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현재 EU의 문화산업은 회원국 전체 GDP의 약 5%, 노동인구의 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지원 계획으로 25만 개의 일자리, 2,000개의 영화관, 800편의 영화,

4,500권의 번역물을 양산할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문화 관련 기업들에 대해 7억 5,000만 유로의 은행 대출이 풀리게 될 것이다.<sup>1</sup>

특히 이번 2차 창조적 유럽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지원 목표 중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과 발전’을 문화와 미디어 양 부문에서 반복 강조했다는 점이다. 1차 지원에서는 초국경적 순환, 문화 간 소통 등 주로 EU 통합 차원에서 문화의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금번 2차 지원에서는 문화의 경제적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문화와 비즈니스의 결합’이라는 과제가 전면에 등장한 것은 경제회복이 최우선 당면목표인 EU의 현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은행자금 융통도 문화 기업들의 상업적 진출을 가속화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 ★ 창조적 유럽 1, 2차 지원계획 비교

구분		1차(2007~2013)	2차(2014~2020)
목표	문화	초국경적 순환, 문화 간 소통, 유럽 정체성 강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노하우 발전, 디지털 시대의 적응, 문화산업 소비자층 확대, 예술종사자의 글로벌화
	미디어	경쟁력 강화, 미디어 작품 배포, 제3세계와의 연대	디지털 시장 접근성 확대, 문화산업 소비자층 확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전
지원액	문화(30%)	3억 5,100만 유로	4억 3,800만 유로
	미디어(50%)	6억 4,350만 유로	8억 300만 유로
	총액(100%)	11억 7,000만 유로	14억 6,000만 유로

자료: European Com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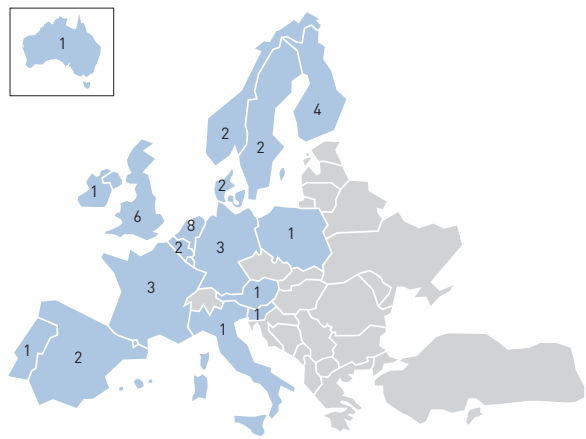
### 문화의 상업화, 창조적 충돌(Creative Clash)

문화와 경제의 결합이 EU의 문화산업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면서 비영리 기관인 ‘창조적 충돌’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2009년 EU 문화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출범한 창조적 충돌은 ‘유럽을 예술로 변혁한다.’는 미션하에 유럽 전역에서 활동 중인

<sup>1</sup>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의 Creative Europe 부문 참조 <[http://ec.europa.eu/culture/creative-europe/index\\_en.htm](http://ec.europa.eu/culture/creative-europe/index_en.htm)>

비영리 협동조합이다.<sup>2</sup> 여기서 충돌(Clash)이란 전혀 상이한 두 영역인 예술과 경제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에 예술가를 파견해 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내는 프로그램, 이른바 ‘조직에 대한 예술적 개입 (Artistic Intervention in Organisations, 이하 예술적 개입)’이다. 예술적 개입은 ‘예술세계의 사람, 경험, 생산물을 기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활용하는 것’<sup>3</sup>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창조적 충돌이란 예술과 기업의 창조적 만남을 통해 상호혁신과 공동발전을 이끌어내는 예술적 개입의 범유럽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다.

#### ★ ‘조직 내 예술적 개입’ 기업의 분포<sup>4</sup>



자료: Iris, G. L. (2007), Transitional arrangements in the enlarged European Union: How free is the free movement of workers? *Croatian Yearbook of European Law and Policy*, 3.

<sup>2</sup> 리드 파트너는 틸트(스웨덴), 핵심 파트너는 C2+I(스페인), 베를린 사회과학 연구센터(독일), KEA European Affairs(벨기에), 3CA예술협회(프랑스), 협력 파트너는 유럽문화행동, 유럽음악위원회, 취리히예술대학, 국립과학연구센터(프랑스), 기푸스코아주 고용주협회(스페인) 등 13개 기관, 일반 파트너는 현대공연예술국제네트워크(ETM), 유럽예술기관협회(ELIA), PAROC 그룹(핀란드) 등 14개 기관

<sup>3</sup> Ariane, A. & Anke, S. (2013). Artistic Interventions in Organisations: Finding Evidence of Values-added. *Creative Clash*.

<sup>4</sup> 설문대상 56개 기업 중 유효 응답을 준 41개 기업의 분포. 이하 ‘조직 내 예술적 개입’ 관련 수치는 모두 Anna, G. & Tiago, P. (2013). Artists in Organisations—mapping of European producers of artistic interventions in organisations. *Creative Clash*,에 근거.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을 전후로 예술적 개입을 통해 기업의 창조경영을 지원하는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점차 이들의 성과가 가시화됨과 동시에 스웨덴의 민간조직 틸트(Tilt)를 중심으로 공동 작업과 연구를 진행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자 2009년부터는 EU 차원의 지원이 시작되었다. 20세기 말 극소수 조직에서 시작된 ‘예술적 개입’ 조직은 2013년 3월 현재 틸트(스웨덴), C2+I(스페인), 켈투어온더넴(네덜란드), 3CA(프랑스) 등 16개국 56개 기업으로 늘어났다.

#### 창조적 충돌(예술적 개입)의 구체적인 사례

예술적 개입의 대상 고객과 임무는 매우 다양하다. 기업의 요구에 따라 중개 조직의 프로듀서가 선택한 예술가가 기업으로 파견되어 제품 개발,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 향상, 경영 혁신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 [사례. 1] 신제품 개발

- 참여 조직: C2+I(스페인)
- 대상 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Grupo i68
- 과제: 정보시스템 접근용 인터페이스 개발
- 예술가: 파올라 토그나지(안무가 & 비디오아트 예술가)
- 수행 방법: 육체적, 감정적 교류로 감각 인지력을 제고
- 결과: 9개월간의 협업을 통해 사용성과 인간공학적 측면을 최대화한 ‘Humanising Software’ 개발에 성공

##### [사례. 2] 직원의 혁신역량 개발

- 참여 조직: 틸트(스웨덴)
- 대상 기업: 친환경 기술인 생산업체 아스펜 페트롤리움
- 과제: 혁신을 통한 생산과 직원의 생산성 향상
- 예술가: 무용가
- 수행 방법:
  - 무용가 1명이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0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1년간 사업을 진행
  - 첫날 민속의상과 설거지 세척도구를 이용한 춤을 공연한 후 춤과 예술에 대한 자유, 수평 토론을 진행
  - 매주 1회 이상의 작업, 토론, 워크숍을 진행
  - 무용가의 관점, 즉 새로운 관점에서 대상에 접근하는 방법, 마인드의 변화를 유도 (예를 들어, 지게차의 움직임을 춤으로 받아들이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게차와의 발레 공연을 시현)
  - 새로운 소통 방식이 등장하면서 생산성이 향상

##### [사례. 3] 경영 리더십 개선

- 대상 기업: 독일 종이포장 기업
- 과제: 파업 등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위 관리자들의 리더십 개선
- 예술가: 그래피티 예술가 그룹
- 수행 방법:
  - 고위관리자 60명이 무너진 베를린 장벽의 그래피티 작품을 사진 촬영하게 하여 마인드 전환을 유도
  - 해당 기업의 포장재로 벽을 만든 후 관리자들이 직접 기업의 분위기를 그래피티로 표현
  - 베를린 장벽과 동일한 벽을 만들어 리더십에 대한 인식과 조직문화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게 유도
  - 결과물을 포츠담 플라자에 실제로 전시하고 작품을 직접 설명하게 하여 스스로 리더십의 변화를 체험
- 결과: 조직의 긍정적인 변화를 체험한 결과 전면적인 효과를 위해 동일 체험을 전 직원에게 확대



#### 예술적 개입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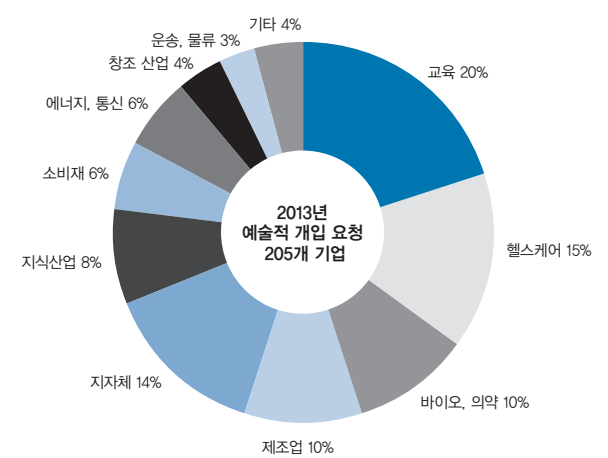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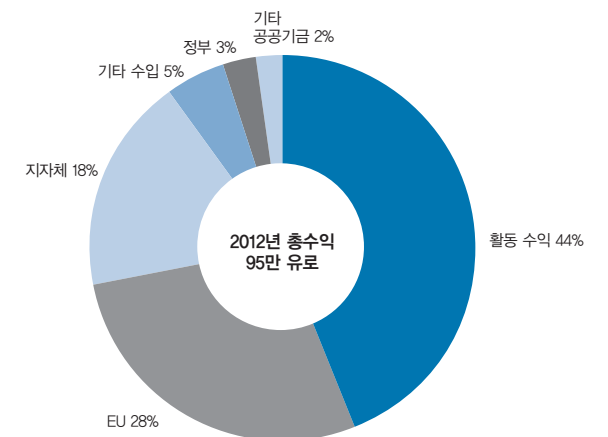
예술적 개입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이미 다양한 측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우선, 해당 전문 기업이나 조직이 단명하지 않고 시장에서 장기간 살아남고 있다는 것이 그 첫 번째 증표다. 2013년 기준으로 유럽에서 해당 조직 중 거의 절반(46%)이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다.<sup>5</sup> 다음으로 예술적 개입에 대한 민간 영리기업의 수요가 공기업이나 비영리 민간기업과 대등한 수준이라는 것도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적합성을 대변한다. 전체 관련 조직 중에서 민간 영리기업과 협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87%로, 공기업(85%), 비영리 민간기업(75.6%)과의 협업 비중보다

<sup>5</sup> Anna, G. & Tiago, P. (2013). Artists in Organisations—mapping of European producers of artistic interventions in organisations. *Creative Clash*.

소폭 앞서고 있다. 그 결과 애초에는 공적 지원금에 대부분 의존하던 예술적 개입 전문 조직들의 수익구조에서도 자체적인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비중이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인 스웨덴의 틸트는 자체 활동을 통한 수익 비중이 44%로 EU(28%), 지자체(18%), 정부(3%) 등의 지원 규모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

좀 더 세분화해서 접근해보면, 상업적 성공 가능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매우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예술적 개입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2013년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예술적 개입을 요청한 205개 기업의

#### ★ 틸트의 수익구조(上) 및 예술적 개입 대상 업종(下)



자료: Ariane, A. & Anke, S. (2013). Artistic Interventions in Organisations: Finding Evidence of Values-added. *Creative Clash*; Anna, V. (2013). Support Schemes for Artistic Interventions in Europe—a mapping and policy recommendations. *Creative Clash*.



업종 분포는 교육(20%), 헬스케어(15%), 지자체(14%), 제조업(10%), 지식산업(8%), 에너지·통신(6%), 소비재(6%) 등으로 매우 다채롭다. 특히 제조업, 에너지·통신 등 예술과 전혀 관련 없는 분야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술적 개입의 향후 시장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다.

대상 업종과 함께 실질적인 효과 내용도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은 기업들이 인정하는 효과는 직원들의 관점의 혁신이다. 예술적 개입 이후 임직원들이 ‘많이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기업이 가장 많고(57.1%), 그 밖에 능동성(55.6%), 업무 협업(43.4%), 자기개발(42.9%) 등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기업도 거의 절반에 가깝다. 매출, 생산성, 업무 속도 등 매우 구체적인 경영 효율 면에서도 18%의 기업이 정량적인 효과를 보았다고 응답했는데, 이것도 무척 고무적인 사실이다.

#### ★ 예술적 개입의 효과

개선 내용	기업 수	비중(%)
경영 효율(매출, 생산성, 업무속도 등)	37	18.0
대내외 인간관계	63	30.7
창조적 업무방식(우연과 새로움의 수용)	64	31.2
팀워크(리더십, 직장 분위기)	65	31.7
자기개발	88	42.9
협업적 업무방식(collective→collaborative)	89	43.4
능동성	114	55.6
많이 다르게 보기	117	57.1

주: 기업 수와 비중은 예술적 개입을 수용한 205개 기업 중 개선 항목에 긍정적으로 대답한 기업의 수와 비중  
자료: Ariane, A. & Anke, S. (2013). Artistic Interventions in Organisations: Finding Evidence of Values-added, Creative Clash.

#### 예술적 개입의 성공 비결은 관점과 매뉴얼

매우 추상적일 수 있는 예술적 개입이 구체적인 상업적 성공을 거두는 비결은 먼저 운영하는 조직 혹은 기업의 철저한 ‘이중적 관점’에서 시작된다. 먼저, 운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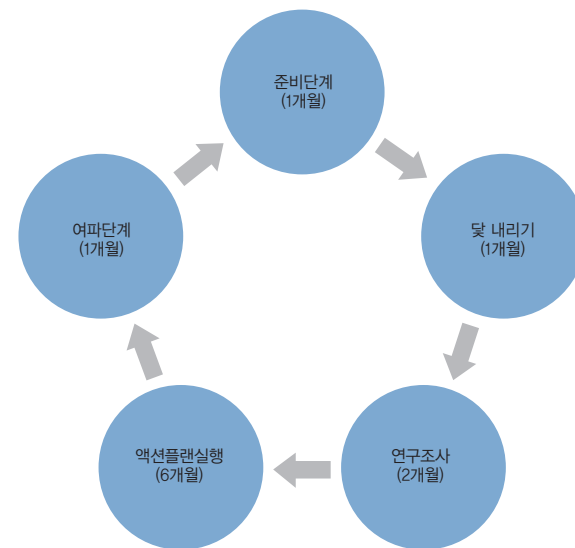
기본 목표는 철저하게 상업적이다. 설문조사<sup>6</sup>에 따르면, 이들 조직이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참여하는 예술가(혹은 그 기술)나 해당 조직 직원들의 성장 등이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의 성장이다. 51.2%의 조직이 조직의 성장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31.7%는 예술가와 기술 향상, 14.6%는 피고용인의 성장을 최고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마디로 예술과 복지보다는 기업의 실적 향상에 보다 더 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기여 대상은 사회(Society)로 설정된다. 이 점에서는 철저히 공익적인 관점을 견지한다. 70.7%의 조직이 사회에 대한 기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관점은 한편으로는 기업들의 수요를 유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지원을 유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기업(48.7%)이 민간기업, 공기업 등 동시에 4개 이상의 다양한 기업들과 협업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이와 함께 예술적 개입을 운영하는 기업들은 자칫 뜬구름 잡기 쉬운 ‘개입 작업’을 철저하게 매뉴얼화하여 반복과 변주를 통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사후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톨트는 2002년부터 10년간 시범연구를 통해 예술가의 효과적인 예술적 개입을 위한 이른바 ‘AIRIS(Artists in Residence) 실행방법론’을 개발하였다. 11개월을 한 주기로 하는 5단계 프로그램으로 ① 준비단계(Preparation, 1개월), ② 닻 내리기(Anchoring, 1개월), ③ 연구조사(Research, 2개월), ④ 액션 플랜 실행(Action Plan Implement, 6개월), ⑤ 여파단계(Aftermath, 1개월)로 구성된다.

톨트는 이 5단계 실행 매뉴얼에 따라 ‘예술적 개입’을 진행하는 동시에 사전에 ‘개입’에 참가할 예술가를 양성하기 위한 예술가 전용 ‘변화 관리 초기 훈련

<sup>6</sup> Anna, G. & Tiago, P. (2013). Artists in Organisations—mapping of European producers of artistic interventions in organisations. *Creative Clash*.

#### ★ 톨트의 AIRIS 실행방법론



자료: 톨트 홈페이지

모듈’ 사후에 ‘개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 모듈도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IMIT(Institute for Management of Innovation and Technology)에 의뢰하여 50개 조직을 대상으로 예술적 개입의 전 과정(사전 준비 단계에서 종료 후 평가까지)에 걸쳐 관계자들과의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가능한 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가지표를 산출하고, 개별 ‘개입’의 종료 후에 12개월 간 단기 및 장기 평가를 수행하고 최종적으로 연간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인 평가를 내리는 시스템이 마련되었다. IMIT의 정량적 평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수행한 톨트의 모든 예술적 개입 프로젝트는 창의력과 혁신 17%, 업무 환경 개선 25%, 갈등 완화 12% 등과 함께 100만 유로에 해당하는 기업 이미지(Employer’s Brand) 개선 효과를 보았다.

작업의 매뉴얼화와 평가 모듈의 개발은 비단 톨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예술적 개입 조직인 C2+I도 특유의 작업 매뉴얼 및 평가 모듈인 ‘CI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6단계 실행 프로그램과 내외부 2-Track 평가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데,

톨트와의 차이는 예술과 기업이 만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세심하게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다. 또한 ‘개입’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극대화하고 민간 영리기업과 비영리 조직 간의 균형을 중요시한다.

#### 예술적 개입을 한국의 창조경제에 활용

이렇듯 유럽에서 창조산업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예술적 개입은 창조경제를 최고의 국정과제로 설정한 한국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예술의 시너지가 제품 디자인 개발, 광고 등 지극히 단편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 활동의 전 부문에 적용되어 경제 전반의 창조적 혁신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예술적 개입, 즉 ‘창조적 충돌’의 핵심이다. 예술적 방법론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스며들어 국가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가능성을 이러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예술계의 창조적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011년 8월부터 한국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이 ‘예술을 통한 창의경영 지원사업(일명, 아르코)’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술이 한국의 기업들에 접목되어 조직문화, 경영 미학 등 산업계에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해본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구제금융 탈출

## PIIGS' Graduation from Financial Assistance

PIIGS can make a clean exit from financial assistance, or enter a new assistance programme or a precautionary programme, depending on the sustainability of their public debt and their vulnerability to shocks. Ireland made a clean exit in December 2013, supported by significant budgetary and current-account adjustment and signs of economic recovery. But Irish debt sustainability is not guaranteed and prudence will be needed to avoid future difficulties. A clean exit for Portugal is not recommended when its programme ends in June 2014, because compared to Ireland it faces higher interest rates, has poorer growth prospects and has probably less ability to generate a consistently high primary surplus. A precautionary arrangement would be advisable. In case debt sustainability proves difficult to achieve later, some form of debt restructuring may prove necessary. It is unlikely that Greece will be able to exit its programme in December 2014. A third programme should be put in place to take Greece out of the market until 2030, accompanied by enhanced budgetary and structural reform commitments by Greece, a European boost to economic growth in the euro-area periphery and willingness on the part of lenders to reduce loan charges below their borrowing costs, should public debt levels prove unsustainable despite Greece meeting the loan conditions. Even assuming all goes well, the three countries will be subject to enhanced post-programme surveillance. Managing such decades-long relationships will be a key challenge.

유로존 재정위기국인 포르투갈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탈출(Exit)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가 오가고 있다. 2년 전까지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지 모른다는 그렉시트(Grexit)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2014년 1월 포르투갈, 2월 아일랜드에 이어 4월에는 그리스까지 차례로 국제발행에 성공하면서 마침내 유럽이 재정위기의 긴 터널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최근 브뤼셀 연구소는 이들 국가의 구제금융 프로그램 완전 탈출 가능성과 이후의 관리 체제에 대해 제안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 재정위기국은 3년간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종료한 이후 클린엑시트(Cleanexit), 예방적 금융지원 프로그램,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최선은 완전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종료를 의미하는 클린엑시트이나 금융상의 어려움을 다시금 겪게 될 가능성이 높으면 후자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현재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안정기금(ESM)의 대출상환 기간은 아일랜드와 포르투갈이 20년, 그리스가 30년, 키프로스는 15년으로,

이들 국가는 향후 평균 20년 동안은 트로이카(ECB, EU, IMF)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일랜드는 2013년 12월 제일 먼저 클린엑시트를 발표하고, EFSF와 ESM 대출의 75%를 상환할 때까지 진행되는 사후감시프로그램(PPS: Post-Programme Surveillance)에 들어갔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지난 3년 동안 긴축의 고통을 감내한 아일랜드 국민의 승리라고 자축했으며,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아일랜드의 성공을 축하했다. 아일랜드의 성공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 포르투갈은 2014년 6월, 그리스는 2014년 12월에 클린엑시트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클린엑시트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에서는 각국의 '부채 지속가능성(debt sustainability)'을 판단하기 위해 이들 국가의 GDP, 재정수지, 이자율, 은행 재자본화 등 경제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5가지 조건을 놓고 기본 시나리오와 부정적 시나리오를 설정했다. 그 결과,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은 모두 아직 외부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진행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가장 낙관적으로 보이는 아일랜드의 경우, 부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부채 상황(debt dynamics)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위험과 충격에 대비한 은행 시스템의 재구조화와 재자본화는 여전히 필요하고, 현재 200억 유로로 추정되는 현금 완충장치(Cash Buffer)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르투갈은 2014년 1월에 5년 만기와 10년 만기 국제발행에 성공하면서, 오는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구제금융 탈출에 대한 시장의 호의적인 평가를 확인했다. 하지만 보고서에서는 2014년 6월에 클린엑시트하는 것보다는 예방적 조건부 차입선(PCCL: Precautionary Conditioned Credit Line)의 형태로 금융지원을 받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트로이카와 약속한 개혁의 성과가 부족했기보다는 고질적인 거시경제 불균형 문제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위기 이전부터 포르투갈은 장기 저성장, 낮은 생산성, 높은 실업률, 높은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위기 이후 혹독한 긴축정책으로 재정적자와 경상적자 수준이 낮아졌지만, 공공부채와 실업률은 위기 이전보다 두 배나 높아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포르투갈은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필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르투갈의 경제구조는 경쟁력이 약한 비교역제 산업에 집중되어 있어서 교역제 산업으로 구조를 전환해야 하는데, 산업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트로이카의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스에 대해서는 3차 구제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동시에 구제금융 상환기간을 현재 3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 유리보와의 금리스프레드를 0으로 낮추어 채무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정적 시나리오를 적용했을 시 2014년 말 2차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그리스가 독자적으로 자금조달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 경제는 아직 충격에 상당히 취약하여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그리스 정부가 채무추세(debt trajectory)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비상경제대책(contingency plan)을 제안했다. 첫째, 2018년까지 균형재정 달성, 둘째, 2030년까지 400억 유로 규모의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실행, 셋째, 그리스의 경제성장을 재개하기 위한 범유럽 차원의 투자, 마지막은 EFSF와 ESM로부터의 대출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이제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는 자체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져서 외형적으로는 구제금융 탈출이 준비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위험과 충격에 취약하여 선부터 탈출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보고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부채를 모니터링하고 경제구조개혁 노력을 계속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 진행되는 사후감시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이 트로이카로부터 정치·경제적으로 완전히 벗어나는 진정한 탈출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이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EIB와 EBRD 등이 재정위기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전 유럽 차원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Darvas, Z., Sapir, A. & Wolff, G. B. (2014, 2.), The Long Haul: Managing Exit from Financial Assistance, Bruegel.)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 아시아 지역 대학원생 워크숍 Graduate School Students Workshop in Asian Region

A workshop for EU centre graduate school students was held at Royal Melbourne Institute of Technology, Australia, on February 17<sup>th</sup> and 18<sup>th</sup>. The theme of this workshop was <EU in the 21<sup>st</sup> Century>, and 14 graduate school students introduced their theses. Since there was no limitation to the themes and academic areas, the participants freely presented their own research findings. Each EU centre in Asian regions sent two graduate school students and one centre representative.

지난 2월 17~18일에 호주 로열 멜버른 공과대학교에서 EU센터 대학원생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21세기의 EU>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14명의 대학원생들이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논문의 주제나 학술적 분야에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자유롭게 자신의 연구 내용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각 EU센터에서는 2명의 대학원생과 1명의 센터 관계자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 제2차 한-EU 협력포럼 개최 The 2<sup>nd</sup> Korea-EU Cooperation Forum

On March 5<sup>th</sup> 2014, the 2<sup>nd</sup> Korea-EU Cooperation Forum was held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title of the forum was <Solution to Youth Unemployment-Based on the Apprenticeship System of Europe>. Kirak Ryu, a research fellow of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presented the main features of the German apprenticeship system. He pointed out that securing talented work forces and solving the youth unemployment are the imminent issues facing European countries, and that countries which managed to solve both problems were Germany, Netherlands, Austria, and Switzerland. He stated that their formula was the traditional dual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especially the German apprenticeship system. He emphasised that the U.S. and the U.K. were benchmarking the German apprenticeship system for the revival of manufacturing industry.

지난 3월 5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2차 한-EU 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청년실업의 해법, 유럽 도제제도에서 배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류기락 부연구위원이 독일식 도제제도(apprenticeship system)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노동력 확보와 청년실업 문제 해소는 유럽 국가들의 당면과제이며, 이 두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 국가는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위스라고 언급했다. 이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한 비결은 바로 독일식 도제제도로 대표되는 오랜 전통의 이중 직업교육훈련제도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미국, 영국 등도 제조업 부활을 위해 독일식 도제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2014년 1학기 EU 아카데미 개강 The 5<sup>th</sup> EU Academy in Spring Semester 2014

On March 12<sup>th</sup> 2014, Yonsei -SERI EU Center opened the 5<sup>th</sup> EU Academy in the spring semester, 2014. The theme was <The Innovation and Social Contribution of the EU>, and the participants were 30 college and graduate school students interested in the EU. Since 2010, the EU has implemented steps for sustainable growth and modernisation of labour markets based on th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called <Europe 2020 Strategy>. With the importance of CSR growing in Korea, there has been a need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mode of advanced EU nations that embrace a wide spectrum of interested parties. Accordingly, the 5<sup>th</sup> EU Academy programme was aimed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the European social contribution models.

지난 3월 12일, 연세-SERI EU센터는 2014년 봄 학기를 맞이하여 제5기 EU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번 주제는 <EU의 혁신과 사회적 공헌>이며, 참가자는 EU에 관심이 있는 전국 학부 및 대학원생 30명이다. 2010년 이후 EU는 경제발전 전략인 <유럽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을 바탕으로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노동시장 현대화 등의 의제들을 꾸준히 실행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노동과 지역사회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유럽 선진국들의 모델에 주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EU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유럽의 사회공헌 모델과 사회혁신 의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한다는 목표하에 제5기 EU 아카데미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 싱가포르 EU 공공외교 워크숍 Singapore EU Public Diplomacy Workshop

On March 21<sup>st</sup> 2014, EU Public Diplomacy Workshop planned by the Singapore EU Centre was held. With the theme, <Public Diplomacy of EU and the Role of EU Centres>, this workshop invited EU centre representatives from Asia-Pacific region. The major topic was the role of EU centres in realisation of public diplomacy. The specific plans suggested in the workshop include the joint funding of EU centres in Asia for publication, EU research innovation programmes such as Horizon 2020 project, and Jean Monnet Fund, etc.

지난 3월 21일, 싱가포르 EU센터가 기획한 EU 공공외교 워크숍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EU의 공공외교와 EU센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EU센터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주요 논의는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EU센터의 역할이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책 출간과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 프로젝트'나 장모네 기금을 아시아 지역 EU센터가 공동 지원하여 공공외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제1차 EU 현지전문가 초청세미나 개최 The 1<sup>st</sup> Ideas from the EU Seminar

On April 9<sup>th</sup> 2014, the 1<sup>st</sup> Ideas from the EU Seminar was held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The theme was <Made in Italy: the Competitiveness of Italian Hidden Champions>. Kyung-suk Kim,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Vatican, was the presenter. Ambassador Kim said that although Italy was one of the crisis-stricken nations of eurozone, it is the 9<sup>th</sup> 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the 2<sup>nd</sup> manufacturing power in Europe. He emphasised that the central pillar of Italian economy was small but strong companies or the hidden champions that produced renowned 'Made in Italy' products. The successful cases of hidden champions will be good examples that Korea can learn in order to grow as a manufacturing power.

지난 4월 9일,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제1차 EU 현지전문가 초청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메이드 인 이탈리아,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김경석 주교황청 대한민국 대사가 발표하였다. 김경석 대사는 이탈리아가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하나로 PIIGS라고 불리었지만, 세계 9위의 경제대국이자 유럽 2위의 제조업 강국으로서 위상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강소기업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경제의 버팀목은 바로 세계적인 명품 '메이드 인 이탈리아' 제품을 만드는 히든챔피언 강소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강소기업의 성공 사례는 우리 기업은 물론 한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귀중한 힌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